



■ 수시보고서 2013-06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신영석 · 윤강재 · 강지원

【책임연구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주요저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미래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수시보고서 2013-05

한국형 복지모형의 모색

발행일 2013년
저자 신영석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106-9 93330

발간사 <<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본격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 여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때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채택하고 4대 전략 6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상적인 한국형 복지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학계도, 전문가그룹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바로 이러한 때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복지논쟁이 학계를 중심으로 이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 시점의 복지논쟁은 정치권에서 야기되었다. 2011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무상복지논쟁은 여야의 복지헤게모니 선점 노력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논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욕구 요인들을 폭넓게 고려한 정책지향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치권의 선제적 이슈 제기가 오늘날 복지논쟁의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촉발시킨 복지논쟁을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한국형 복지모델의 이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위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대국민설문조사를 통하여 복지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서 복지를 확대하였던 나라들의 경험을 구체화하였다.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할 새로운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21세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한국형 복지 모델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복지정책의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및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학자, 정책담당자, 그리고 관계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보고서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윤강재 부연구위원, 강지원 전문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이태진 연구위원, 이상영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사공진 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문진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한국의 복지위상	17
제1절 지속가능성 분석	19
제2절 복지 수준 분석	30
제3장 국민복지인식조사	41
제1절 선행연구	43
제2절 조사설계	56
제3절 조사결과	58
제4장 한국형 복지모델의 탐색	77
제1절 복지패러다임 논의	79
제2절 전문가 논의	83
제3절 선진국 사례 검토: 영국의 National Plan	8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3
참고문헌	99
부록	101

표 목차

〈표 2- 1〉 재정수지	23
〈표 2- 2〉 국가채무	24
〈표 2- 3〉 정부발행 부채총액	26
〈표 2- 4〉 국가경쟁력 순위	27
〈표 2- 5〉 국민부담율 비교	33
〈표 2- 6〉 정부재정 대비 복지예산 비중	34
〈표 2- 7〉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	36
〈표 3- 1〉 응답자 특성	57
〈표 3- 2〉 가족 중 복지수혜 구성원-상세분석	59
〈표 3- 3〉 거주지 유형에 따른 복지 대상층 정부지원 수혜(복수응답)	61
〈표 3- 4〉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사회보험 수혜(복수응답)	62
〈표 3- 5〉 응답자 연령별 맞벌이 가구	63
〈표 3- 6〉 연령대에 따른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중요도	65
〈표 3- 7〉 연령대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66
〈표 3- 8〉 성, 연령대 별 복지정책 현상 유지 및 축소 이유	67
〈표 3- 9〉 연령대에 따른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복수응답)	68
〈표 3-10〉 연령대 별 복지정책 수행 시 가장 중점 과제	70
〈표 3-11〉 성, 연령대, 월평균 가구소득 별 복지세금 증세 의견	71
〈표 3-12〉 연령대별 증세 방안 이외의 자원마련 방안	72
〈표 3-13〉 연령대, 월평균 가구소득 별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	74
〈표 3-14〉 성, 거주지 유형별 복지비용 조달 방안	76
〈표 5-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변화 전망	97
〈표 5- 2〉 국민소득 2만불 수준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항목별 차이 비교	98

그림 목차

[그림 2- 1] 기준지표 분석결과	25
[그림 2- 2] 세부 분야별 국가경쟁력 비교	28
[그림 2- 3] 정부재정 구성비	35
[그림 2- 4] 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통한 복지국가 유형 분류	38
[그림 3- 1] 가족 중 복지수혜 구성원(복수응답, n=1,000)	59
[그림 3- 2] 가족 중 복지 수혜 대상자의 복지급여(n=417)	60
[그림 3- 3] 사회보험 수혜자 (복수응답, n=1,000)	61
[그림 3- 4] 맞벌이 부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n=358)	64
[그림 3- 5] 복지정책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 (n=600)	65
[그림 3- 6]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 (복수응답, n=1,000)	68
[그림 3- 7] 복지정책 수행 시 가장 중점 과제 (n=1,000)	69
[그림 3- 8] 증세 방안 이외의 재원마련 방안 (n=1,000)	72
[그림 3- 9]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 (n=1,000, 단위 : %)	73
[그림 3-10] 복지비용 조달 방안 (n=600)	75
[그림 4- 1]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개요	81
[그림 4- 2] 고부담-고복지지출 국가군의 성공기제	84

Abstract <<

In search of Korea's Welfare Regime

In fact, virtually all welfare states are going through a period of crisis and restructuring and social policy is central to the political debate in virtually all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identification of a number of ideal-types of social protection provides a picture of the options available for reform. It is necessary since nothing prevents policy-makers from developing completely new solutions to current problems. However if one looks at history, one will find that reforms have frequently been incremental, and that the example of foreign count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errera, 1993: 126). In addition, in today's highly interdependent world, purely national solutions to problems of this scale are increasingly unlikely (Bonoli, 1997).

In this respect, a classification of welfare states, and the subsequent identification of ideal-types, can give an approximate picture of the range of options available to policy-makers for policy re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increased new risk of society is well established. However what is less clear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i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needs response of new social risks varies by welfare state and if so, the extent to which this can be explained through reference to the different welfare state regim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vary across 10 OECD countries and by the different approaches to social protection taken by the four welfare state regimes(Scandinavian, Bismarckian, Liberal, Southern).

The data source is made up of OECD National Account database(from 1980-2011)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rom 1980-2009, but Korea is 1990-2009), and Sustainability (OECD Stats) from 10 countries.

The present paper consist of 4 chapters. First, we describes this paper's background and aim, study method and contents. Second, we analyze the welfare status in Korea in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and welfare regimes. For this we analyze Korea's conditio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at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 future welfare state considered. Third, we explain the survey how level the Korea's welfare performed and recognized. The results show most Korean want to expand the welfare policy but they do not want to increase the tax burden. Eventually, we show the vision for Korea's welfare regime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등의 실시로 1차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2008)로 2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도적인 측면 혹은 양적인 측면의 복지 노력이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논의는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 수준의 확대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복지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확대 기초를 유지해온 복지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복지논쟁과 갈등속에서 태동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시절 이미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2)을 추진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행복 복지공약과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때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과 전망을 통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고민해보고 합의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하고 전망해보자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한국의 복지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수준을 분석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기준지표는 재정수

4 한국형 복지모델 전망과 모색

지와 국가채무이다. 한국과 스웨덴은 재정적자 3% 미만과 국가채무 60%미만이라는 기준지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지표를 만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부수지표를 분석하였다. 부수지표는 국가부채의 해외의존도, 국가경쟁력과 경상수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가부채 중 해외비중이 10%이하인 국가는 일본과 영국, 미국으로 나타났고, 국가경쟁력이 상위 30위 이내에 있으면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로는 독일만 포함되었다. 요약하면 한국과 스웨덴,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의 6개국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준을 살펴보는 기준지표는 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활용하였다. 이 때 기준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고복지-고부담 유형(A)에는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 포함되었고, 저복지-고부담 유형(B)에 포함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복지-저부담 유형(C)에는 한국과 미국이 포함되었으며, 고복지-저부담 유형(D)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건전한 편이고 저복지-저부담 유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복지를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경직성 복지지출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전망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복지확대보다 더 선호하고 있지만, 복지정책 자체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뒷받침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56.7%), 증세 이외의 복지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정부의 다른 지출 축소(44.3%), 지하경제 양성화(28.1%), 기부금 활성화(15.0%), 수혜자 부담 증액(7.7%)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으로 선별적 복지(43.2%)를 선호하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39.8%)에 대한 선호 역시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한국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정치권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을 접화하였다면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전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선언적으로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요용어: 지속가능성, 복지인식, 복지유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국가복지는 기자조선 때 윤회법(輪環法)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환과고독(鰥寡孤獨)¹⁾을 부양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김상균 외, 2001: 199). 이러한 국가복지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는데 국가통치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국가별로 제도명이나 기관명에 차이가 있으나 각종 재해시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거나,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자를 지정하거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설립 이후 전후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의 변영과 국가재건이 시대과제였던 시절에도 전재민(戰災民)에 대한 단순구호나 일제 말기의 '조선구호령'을 원용한 생활보호 사업을 행하는 정도의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복지를 추진하였다(안상훈, 2011).

현대적인 국가복지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던 1960년대에 이르러서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로 경제개발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국가소명으로 추진하던 시기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자면 정권의 지지기반이 된 군인들에 대한 보훈과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면서 선언적으로 “복지국가의 건설”

1)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이르는 한자성어로 “홀아비, 과부, 어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등을 일컫는 말”(두산백과)

을 내세웠던 시기이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박정희 대통령 8대 취임사).

이 시기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서 사회복지정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한편 복지대상자에 대한 시설 보호는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 아래 유지되었다(김상균 외, 2001: 205; 안상훈, 2011: 4).

전두환 정부²⁾는 1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고용기회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모든 국민이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풍요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있다”고 선언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이야말로 복지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된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12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국민전체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선언했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전두환 대통령 11대, 12대 대통령 취임사).

그러나 이 시기 사회복지관계법령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상균 외, 2001: 205; 안상훈, 2011:4).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되고,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주의 바람과 함께 지금까지 선언적으로 도입된 각

2)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제4공화국)되었으나, 헌법 개정에 따라 제 5공화국이 선포된 후 대통령선거인단선거를 통해 1981년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중 복지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 전국민 확대 실시(1989), 모자복지법 제정(1989) 등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92) 등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화두는 '세계화'였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1995), 국민건강증진법 제정(1994),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1996), 국민의료보험 제정(공교 및 지역의보 통합,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등 일련의 입법 조치를 통해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국가의 경제위기하에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 1인사업장까지 확대(1998), 실직자 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1998), 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 국민 연금 실시(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1999), 노사정위원회 법제화(1999), 산재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2000), 의료보험의 통합운영(2000) 등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제안했으나 김영삼 정부

3) 김영삼 정부 초기에 사회복지정책은 국정과제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 그러나 1995년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복지개혁에 강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함(안상훈, 2011: 6 재인용; 김태성 외, 2000)

에서 생산적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라면,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보장기본 내용과 자립·자조·자활 지원에 의해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차이가 있다(김상균 외, 2001:206).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의 개선을 강구하고,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복지정책을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제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에 따르면, 참여복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사회복지정책의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2008)과 기초노령연금(2008) 도입 등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친화적인 능동적 복지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되 개인과 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외, 2009). 특히 이 시기에는 저출산·고령화와 다민족다문화 등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하는 위험 요인과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복지전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는 급증하는 지출의 효율화를 꾀해야 하는 부문으로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복지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관리 혹은 통제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무상급식’은 본격적인 복지논쟁의 시발이 되었으며, 누리과정의 확대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분담에 대한 갈등을 점화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복지는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등의 실시로 1차 사회안전망(사회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2008)로 2차 사회안전망(공공부조)의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도적인 측면 혹은 양적인 측면의 발달이었다. 즉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를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복지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확대 기조를 유지해온 복지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문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정책의 도입과 경직성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국가부도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복지논쟁과 갈등속에서 태동한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절 이미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2)을 추진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행

복 복지공약과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임기 내 모두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복지국가 진입’이라는 슬로건이 다르게 체감되는 이유는 정부가 주도하여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데 있다.

선언적인 혹은 양적인 복지국가 시도에서 실질적인 혹은 질적인 복지국가를 천명한 현 시점에서 한국형 복지모델이란 무엇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일반 국민들의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생각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이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데 반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정부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형 복지모델의 추진을 위한 복지개혁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기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안상훈, 2011; 고경환 외, 2012) 복지욕구와 재정제약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복지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여건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국제비교는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복지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와 함께 어떤 이상향으로 가지고 한국형 복지모델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한편 한 국가의 정책은 경로의존적인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책의 설계와 형성, 집행에 있어서 타 정책(예, 조세정책)과의 상보성이나 지금까지 복지정책이 결정되어 온 관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복지모델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단순한 이식을 통해서 한국에서 동일한 제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의 정책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의 기초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복지 확대에 대한 재정부담도 복지의 수혜도 결국 국민들의 의지와 욕구를 반영하여 설계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복지욕구와 재정제약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해 일반 국민

들의 복지인식을 조사하였다.

요약하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분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방법과 설문조사방법, 전문가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취임사를 통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살펴보고 최근 복지논쟁의 의미와 함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의 복지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성과 연령, 거주지, 가족수와 월평균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표본집단 1,000명을 선정하였고, 조사는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pm 3.1\%$ 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국민복지인식조사와 한국의 복지위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는 다양한 논의를 위해 사회복지학, 보건학, 경제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제2장 한국의 복지 위상

제1절 지속가능성 분석

제2절 복지지출유형 분석



2

한국의 복지 위상 <<

제1절 지속가능성 분석

1. 분석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부담-고복지의 유럽형 복지모형을 발전시켰다.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보편적인 급여혜택과 안락한 노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라야 할 귀감이 되었고 이에 따라 후발국가들은 유럽형 복지모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해당 국가에 적합하게 되었는가에 있어는 차이가 있다.

한 예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타격은 남유럽 일부 국가들(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복지국가처럼 편안한 노후생활과 충분한 실업수당, 각종 복지혜택 등을 도입하였으나 저성장에 의한 세입 감소 등 재정수지의 악화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복지분야 경직성 지출의 증가는 이러한 때 더욱 심각한 지출 압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재정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연금 개혁과 퇴직 연령 상향 조정 등 복지 분야 개혁조치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출산수당 제도를 폐지하였고, 아일랜드는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그리스는 퇴직연금 상향조정(여성: 60세→65세)과 공무원 보너스 삭감(30%), 예산 감축 등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들 국가들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복지모델로 평가받은 일부 유럽 국가들 역시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 프랑스는 법정 정년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60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 역시 법정 정년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영국은 단계별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이라는 인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진입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은 복지 후발국가로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안전망의 확립, 사회서비스의 발달 등을 통해 최근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때 남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재정위기와 복지지출의 관계에 대한 선언적인 메시지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사회보험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관계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복지재정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도입 등을 통해 복지지출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우려는 역시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복지지출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기반의 건전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민들이 세부담과 복지수준을 선택하고 복지의 기반이 되는 경제와 선순환적인 관

4) 이러한 주장은 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매일경제(2010/4/7)는 복지를 무작정 늘리고 보자는 포퓰리즘은 그만두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세부담의 한도 내에서 장기복지 계획을 짜고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함.

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복지 지출의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선택된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해당 국가의 대응능력 여부도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정치적 선택에 의해 고부담, 고복지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이는 집권을 위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유럽의 재정적자로 인한 복지개혁을 단순히 유럽복지모델의 실패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정치과정에서의 선택, 복지의 기반인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분석틀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기준 지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이다. EU는 1997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한 재정준칙에 의거하여 “안정 및 성장 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도입함으로써 준칙에 입각한 재정지출 규제책을 쓰고 있다. 본 협약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골자로 하여 중기적 재정목표를 균형 또는 흑자 재정에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의 기준지표인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국가부채는 GDP 대비 60%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부수적 지표는 기준 지표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고려하는 지표이다. 국가부채 중 해외 비중과 국가 경쟁력을 지표로 삼았다. 국가 부채 중 해외 비중은 부채의 상황이 해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성의 손실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국가 부채 중 해외 비중은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 다른 부수 지표는 국가경쟁력인데 이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평가 60개국 중 상위 30위 이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인지를 살펴보았다. 국가경쟁력은 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전년도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 구축 부문의 327개 평가기준에 대해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전 세계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발표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한 지속가능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판단한다. 첫째, 기준지표에 의해서 재정 적자 기준을 달성하고 국가 부채 기준을 만족한 경우이다. 둘째, 부수지표에 의해서 재정 적자 기준을 달성하고 국가 부채 기준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국가부채 중 해외 비중이 10% 이하이거나 국가 경쟁력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이다. 이에 반해 지속불가능은 기준 지표를 만족하지 못하면서 부수지표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이다.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복지지출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에 만약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국가는 정부지출을 전체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지출 중 복지지출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크다면 다른 분야의 지출보다 복지지출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OECD 주요 국가들과 재정위기를 경험한 남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들은 복지레짐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한국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에는 스웨덴과 독일, 미국과 영국,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와 한국을 포함하여 총 10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2. 기준지표 분석

재정수지 자료는 OECD National Account at a Glance(2013)에서 발췌하였다. 재정수지는 2012년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어 2011년 자료와 함께 살펴보았다.

〈표 2-1〉 재정수지

(단위: %)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독일	1.1	-3.8	-3.8	-1.7	-0.1	-4.1	-0.8	0.2
그리스	-3.8	-4.9	-7.5	-6.0	-9.9	-10.8	-9.6	-10.0
이탈리아	-0.9	-3.2	-3.6	-3.4	-2.7	-4.3	-3.7	-2.9
일본	-	-	-	-1.3	-1.9	-8.3	-8.9	-
한국	5.4	5.1	2.7	3.9	3.0	1.3	2.0	-
포르투갈	-3.3	-3.4	-4.0	-4.6	-3.7	-9.9	-4.4	-6.4
스페인	-1.0	-0.2	-0.1	2.4	-4.5	-9.7	-9.4	-10.6
스웨덴	3.6	-1.5	0.4	2.2	2.2	0.0	0.0	-0.6
영국	3.6	-2.1	-3.5	-2.7	-5.0	-10.2	-7.8	-6.3
미국	1.5	-3.9	-4.4	-2.0	-6.4	-11.3	-10.1	-
OECD 전체평균	0.1	-3.3	-3.4	-1.3	-3.3	-7.7	-3.3	-

주: - 는 자료없음.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홈페이지

즉 2011년 기준 재정수지의 OECD 전체 평균은 GDP 대비 -3.3%로 나타났다. 독일(2012, 0.2%)과 한국(2011, 2.0%)은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2012, -10.6%)과 그리스(2012, -10.0%), 미국(2011, -10.1%)의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계속적으로 재정

24 한국형 복지모델 전망과 모색

흑자를 기록하던 스웨덴은 201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적다(-0.6%).

다음으로 국가채무는 OECD Economic Outlook에서 발췌하였다. 국가채무는 2012년 OECD 전체 평균이 GDP 대비 108.8%로 나타났으며 일본(219.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스(165.6%), 이탈리아(140.2%), 포르투갈(138.8%) 등 남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 그룹을 형성하였다. 또한 미국(106.3%)과 영국(103.9%) 등 저복지-저부담 국가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은 35.1%로 10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국가채무

(단위: % of GDP)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독일	60.8	62.5	69.3	69.8	69.9	86.1	86.3	89.2
그리스	115.7	117.9	115.1	121.5	122.4	156.9	178.9	165.6
이탈리아	120.8	118.8	116.8	119.0	116.9	128.9	122.0	140.2
일본	137.6	153.5	166.3	166.8	171.1	193.3	210.6	219.1
한국	15.7	19.2	23.3	28.6	30.4	34.3	36.2	35.1
포르투갈	62.4	68.0	73.5	77.5	80.8	105.5	121.6	138.8
스페인	66.5	60.3	53.3	46.3	47.8	67.8	77.1	90.5
스웨덴	64.3	60.2	60.0	54.3	50.0	49.3	49.4	48.7
영국	45.2	41.1	43.9	45.9	57.5	85.6	100.4	103.9
미국	54.5	56.8	67.5	65.8	75.3	97.9	102.3	106.3
OECD평균	69.9	71.9	77.6	75.9	80.9	98.9	103.5	1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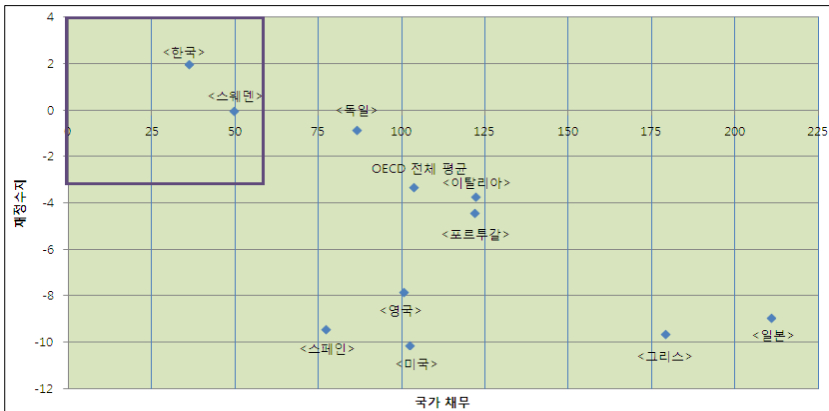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이상에서 살펴본 기준지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스웨덴은 재정적자 3% 미만과 국가채무 60%미만이라는 기준 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독일과 이탈리아

는 재정수지 지표는 만족하였으나 재정수지지표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국가들은 기준 지표 모두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페인과 영국, 미국은 재정수지의 적자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채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리스와 일본, 포르투갈은 재정수지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클 아니라 국가채무 역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기준지표 분석결과

(단위: %, % of GDP)



주: 붉은 선은 기준지표에 포함되는 영역을 표시한 것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OECD Economic Outlook

3. 부수지표 분석

기준지표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 중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두 번째 지표로써 부수지표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저 국가부채는 해외의존도가 높을수록 감축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부채 중 해외비중이 중요한 것이다. 2010년 기준 정부발행 부채총액은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 독일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스웨덴과 포르투갈에 이어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총 국가부채 대비 해외 비중은 그리스(48%)와 포르투갈(30%)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일본과 미국(0%), 한국과 영국(1%)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정부발행 부채총액

(단위: 10억불, %)

	GDP	정부부채 (국내)	정부부채 (해외)	총 국가부채	GDP 대비 비율	해외비중
독일	2,999	1,364	282	1,646	57	17
그리스	324	181	165	346	107	48
이탈리아	1,871	1,779	219	1,998	107	11
일본	4,358	9,113	3	9,116	209	0
한국	1,344	337	4	341	25	1
포르투갈	247	540	65	221	89	30
스페인	1,434	825	94	634	44	15
스웨덴	340	7,883	15	128	38	12
영국	2,186	825	8	833	38	1
미국	14,369	7,883	3	7,887	55	0

주: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 부채규모임.

자료: BIS Quarterly Review, March 2010.

마지막으로 2013년 기준 국가경쟁력(World Competitiveness)은 미국이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웨덴 4위, 독일 9위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2위로 3년 연속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미국의 경우 경제성과와 인프라구축, 스웨덴의 경우 인프라구축, 독일은 인프라구축과 경제성과에서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위를 기준으로 30위를 넘어선 이탈리아(44위), 스페인(45위),

포르투갈(46위), 그리스(54위)의 남유럽 4개국은 정부효율성과 경제성과에서 특히 낮은 순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성과는 국내경제와 국제교역, 고용, 물가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효율성은 공공재정과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 법규, 사회적 여건으로 구성되며, 기업효율성은 생산 및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행태가치로 구성되며, 인프라구축은 기본인프라와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국가경쟁력 순위

(단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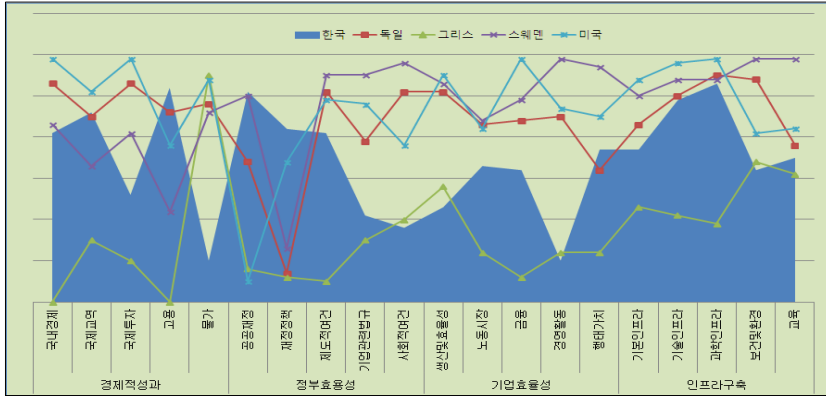
	전체순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독일	9	6	19	15	7
그리스	54	59	56	47	35
이탈리아	44	50	55	46	30
일본	24	25	55	46	30
한국	22	20	20	34	19
포르투갈	46	54	51	48	28
스페인	45	53	50	50	27
스웨덴	4	18	7	3	2
영국	18	15	24	23	15
미국	1	1	25	1	1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그림 2-2] 세부 분야별 국가경쟁력 비교

(단위: 순위)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기준지표로 이미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한국과 스웨덴을 제외하고 부수지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부채 중 해외 비중이 10%이하인 국가는 일본과 영국, 미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경쟁력이 상위 30위 이내에 있는 국가들은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이 있지만 이들 국가 중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독일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수지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는 일본과 영국, 미국, 독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절에서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10개국 중 기준지표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국가로는 한국과 스웨덴이 있고, 부수지표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인한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이 있다. 즉 10개국 중 6개 국가가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의 구

모나 속성이 양호하며,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경쟁력 순위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의 종합 순위(22위)에 비해 정부효율성의 하위분야인 사회적 여건(42위)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보다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지표의 경우 고령화수준과 사회통합, 지니계수, 사회정의 실현정도, 소득분배정도, 균등한 기회보장, 의회의 여성비율, 사법·행정 및 기업 고위직의 여성비율, 성별 소득격차 등 복지관련 지표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제2절 복지 수준 분석

1. 분석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경제세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문제는 한국의 복지지출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의 복지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복지수준은 사회보험프로그램의 도입년수를 통해 측정하기도 하였으나(Cutright, 1965; Flora & Alber, 1981; Schneider, 1983), Esping-Andersen(1981) 이후에는 복지지출을 통해 복지수준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Myles, 1984; Stanley DeVeney, 1983 등).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복지지출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복지지출은 세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는데 현재 국제기구에서는 IMF 재정회계 기준과 OECD 사회복지지출(SOCX)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회계 기준은 정부의 재정규모를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복지대상자에게 돌아간 사회적 혜택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OECD SOCX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복지지출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관계로 서로 보완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IMF 재정회계 기준을 통해서는 각국이 전체 재정 중에서 복지분야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투자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반면, SOCX 기준을 통해서는 각국의 실제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급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 투자하는지를 세부

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복지지출에 대한 기준지표는 전체 국가 예산(IMF 기준) 중 보건과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OECD SOCX 기준)이며, 각각의 지표는 OECD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증가하는 복지 욕구에 따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간 이견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복지지출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담을 완충하기 위해 세입을 확대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입은 감소하면서 복지지출만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통해 재정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표는 재정제약요인이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국민부담율을 활용한다. 따라서 재정제약에 대한 기준지표는 국민부담율이며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복지지출(OECD SOCX)과 국민부담율을 2×2 matrix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의 평균 이상/이하에 따라, 국민부담율의 평균 이상/이하에 따라 4개의 국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복지-고부담 국가들은 복지지출도 많지만 국민부담율도 높은 국가이다. 저복지-저부담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우나 복지지출은 적은 반면, 국민부담률은 높은 국가이다. 이에 반해 저복지-저부담 국가들은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이 모두 낮은 국가들로 지속가능성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복지-저 부담 국가들은 복지지출이 많지만 국민부담률은 낮은 국가들이다.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앞 절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했던 10개국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국민부담률 분석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는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하여 계산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으면 세금부담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여금(보험료)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이철수 외, 2009).

2011년 기준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으로 나타난 반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 한국, 스페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자료가 유효하지 않은 일본과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2010년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각국의 국민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은 2000년 이후부터 줄곧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스페인은 2004년과 2006년에 OECD 평균보다 높은 국민부담률을 나타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리스와 스페인, 스웨덴은 국민부담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 포르투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민부담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5〉 국민부담율 비교

(단위: % of GDP)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독일	37.46	35.63	35.02	35.66	36.52	36.05	37.09
그리스	34.34	33.86	31.50	31.58	32.13	30.88	31.24
이탈리아	41.98	41.11	40.77	42.08	43.04	42.92	42.90
일본	26.65	25.76	26.08	28.09	28.52	27.63	-
한국	22.59	23.21	23.27	25.05	26.52	25.06	25.87
포르투갈	30.85	31.24	30.28	31.76	32.48	31.26	-
스페인	34.31	34.42	34.88	36.91	33.15	32.26	31.58
스웨덴	51.44	47.46	48.06	48.32	46.44	45.52	44.47
영국	36.38	34.82	34.91	36.31	35.83	34.86	35.54
미국	29.51	26.05	25.74	27.90	26.29	24.85	25.09
OECD 평균	35.21	34.46	34.32	35.04	34.52	33.77	35.2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13/8/9 다운로드)

3. 복지지출(SOCX) 분석

복지지출은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는 정부의 일반재정 중에서 분야별 투자 배분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는 복지 분야 내에서 투자 배분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복지지출에 대한 기준지표는 복지지출(SOCX)이지만 정부 재정 중 복지 분야의 비중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UN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의 정부기능분류에 따라 일반정부의 지출⁵⁾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34 한국형 복지모델 전망과 모색

SNA는 정부의 기능을 10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행정, 국방, 사회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택, 보건, 여가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장으로 구성된다. 이 때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회적 이전은 사회보장에 포함되고, 주택에는 주택건설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10개 기능을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6개의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즉 일반행정과 치안에 관련된 사회안전을 포함하여 ‘공공행정’으로, 환경과 주택, 여가문화 및 종교를 포함하여 ‘삶의 질’로 통합하였다.

〈표 2-6〉 정부재정 대비 복지예산 비중

(단위: %)

	보건	사회보장	공공행정	국방	경제	삶의 질	교육
독일	7.04	19.60	7.76	1.07	3.53	2.05	4.26
그리스	5.98	20.37	14.48	2.36	3.22	1.30	4.08
이탈리아	7.36	20.48	10.63	1.52	3.57	2.13	4.24
일본	7.33	18.05	5.96	0.91	4.13	2.35	3.57
한국	4.59	3.95	5.83	2.61	6.07	2.39	4.77
포르투갈	6.83	18.12	10.42	1.33	4.05	2.27	6.35
스페인	6.35	16.87	7.84	1.05	5.25	3.04	4.74
스웨덴	7.04	20.75	8.77	1.49	4.19	2.20	6.79
영국	8.02	17.89	8.20	2.49	2.58	2.89	6.51
미국	8.92	8.86	7.46	4.88	3.93	1.18	6.47

주: 공공행정=일반행정+사회안전

삶의 질=환경보호+주거+여가, 문화 및 종교

굵은 테두리는 복지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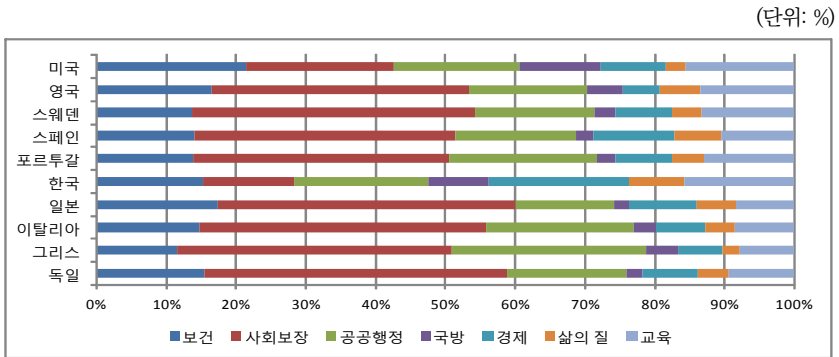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at a Glance(2013/10/2 다운로드)

각국의 일반정부지출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스웨덴(27.91%)과 이탈리아(27.84%)가 가장 높고, 독일(26.64%), 그리스(26.35%), 영국(25.91%), 일본(25.39%), 포르투갈(24.95%), 스페인(23.22%), 미국(17.78%), 한국(8.54%) 순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정부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금액임.

한국은 보건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장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과 함께 국방분야의 예산 비중이 높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경제분야 예산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2-3] 정부재정 구성비



주: 공공행정=일반행정+사회안전

삶의 질=환경보호+주거+여가, 문화 및 종교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at a Glance(2013/10/2 다운로드)

다음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급여 대상자에게 사회적 이전으로 지출한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복지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그 뒤를 이어 독일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모델과 유럽 대륙의 조합주의 복지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들로 2005년 이후에는 조정을 통해 지출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지출이 매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잠정치는 다소 감소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는

36 한국형 복지모델 전망과 모색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1990년부터 복지지출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증가속도는 상당히 급격한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 2-7〉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

(단위: % of GDP)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2	2013
독일	22.1	22.5	21.7	26.6	26.6	27.3	27.1	26.2	26.2
그리스	10.3	16.1	16.6	17.5	19.3	21.1	23.3	22.0	22.0
이탈리아	18	20.8	19.9	19.8	23.1	24.9	27.7	28.4	28.4
일본	10.2	11.1	11.1	14.1	16.3	18.5	22.3	-	-
한국	-	-	2.8	3.2	4.8	6.5	9.2	9.3	-
포르투갈	9.9	10.1	12.5	16.5	18.9	23	25.4	26.4	27.4
스페인	15.5	17.8	19.9	21.4	20.2	21.1	26.7	27.4	28.6
스웨덴	27.1	29.5	30.2	32	28.4	29.1	28.3	28.6	23.6
영국	16.5	19.4	16.7	19.9	18.6	20.5	23.8	23.8	23.8
미국	13.2	13.2	13.6	15.5	14.5	16	19.8	20.0	20.0
OECD평균	15.5	17.2	17.6	19.5	18.9	19.7	22.1	21.9	21.8

주: 2009년까지는 확정치, 2012/2013년은 잠정치임.

한국은 1990년부터 통계 생산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2013/10/2 다운로드)

확정치가 생산된 2009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스웨덴(28.3%), 이탈리아(27.7%), 독일(27.1%), 스페인(26.7%), 포르투갈(25.4%), 영국(23.8%), 그리스(23.3%), 일본(22.3%) 순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9.2%)과 미국(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복지국가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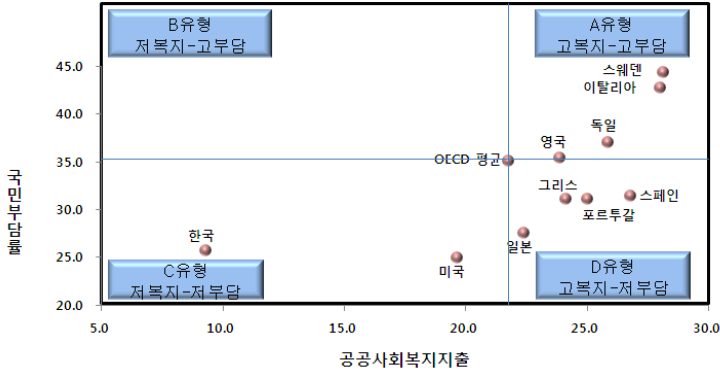
한국의 복지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부담율과 복지지출 수준이라

는 두 가지 기준변수를 살펴본 결과 복지국가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복지-고부담 국가(A유형)로는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3.8%(영국, 2009)에서 28.3%(스웨덴, 2009)로 높고, 국민부담율 역시 35.54%(영국, 2011)에서 44.47%(스웨덴, 20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과 이탈리아에 비해서 독일은 국민부담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두 기준변수 모두 OECD 평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복지-고부담 국가(B유형)은 해당되는 국가가 없으며, 저복지-저부담 국가(C유형)은 한국과 미국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8%(2009)로 OECD 평균보다 2.3%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부담율은 25.09%(2011)로 OECD 평균보다 10.1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9.2%(2009)로 OECD 평균보다 12.9%p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부담율은 25.87%(2011)로 OECD 평균보다 9.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복지-저부담 국가(D유형)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이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2.3%(일본, 2009)에서 26.7%(스페인, 2009)으로 A유형에 비해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부담율은 27.63%(일본, 2010)에서 31.58%(스페인, 2011) 수준으로 A유형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통한 복지국가 유형 분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복지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기반의 건전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민부담율과 복지지출을 통해 복지국가 유형별 현황을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스웨덴은 기준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유형은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고복지-고부담 국가로 에스핑-안텔센 (Esping-Andersen, 1980)이 보편적인 급여가 특징인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로 제시한 국가이다. 스웨덴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폭넓은 사회수당과 욕구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부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복지-저부담 국가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의 미성숙과 잔여적인 소득보장체계 운영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OECD 평균과 국민부담율의 차이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부담을 수준에 비해서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국민적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독일과 영국은 부수지표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가들이며, 복지유형별 국가분석에서는 고복지-고부담 국가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체제의 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은 부수지표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가이지만, 복지유형별 국가분석에서는 고복지-저부담 국가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 체제에서 복지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율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일본처럼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국가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감소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 역시 부수지표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며, 한국과 같이 저복지-저부담 국가유형에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은 복지수준에 비해 국민부담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복지수준을 상향 조정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준지표와 부수지표를 통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남유럽 국가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고복지-고부담 국가유형으로 10개국 중 가장 스웨덴과 유사한 수준의 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기반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다. 이들 국가들은 현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상당히 높은 반면 국민부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국가에서 재정제약을 고려한 복지지출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복지혜택의 급증과 이에 대응한 세입기반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장 국민복지인식조사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조사설계

제3절 조사결과



3

국민복지인식조사 <<

제1절 선행연구

1. 선진국의 복지인식조사

유럽은 그동안 긴 휴가와 조기 은퇴, 넉넉한 연금, 높은 실업 수당, 잘 갖춰진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복지국가의 '이상향'으로 여겨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방되던 유럽의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비난과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 국가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이라 일컫는 국가들에서도 일부 수당제도의 폐지와 연금개혁, 노동시간 연장, 건강보험 및 연금 급여 축소 등 복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근간에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세대별 복지인식의 차이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복지제도를 둘러싼 세대 갈등 표면화'라는 제목으로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⁶⁾.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든 간에 그 본질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경

6) 뉴욕타임즈(2010년 5월)는 "유럽 각지의 젊은이들이 50세쯤 은퇴해서 회회낙락하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젊어서부터 늙어 줄을 때까지 일해야 할 판"이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하였고, 뉴스위크(2007년 5월)는 "유럽의 잃어버린 세대(The Lost Youth of Europe)"라는 제목으로 "유럽에서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이 유럽식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식 세대에는 빙하기와 같은 암울한 고용 전망과 빗더미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보도하였음.

제성장과 자본주의의 발달을 동일시해온 과거세대는 완전 고용, 보편적인 복지 혜택, 충분한 노후생활로 대변되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 이중화와 글로벌 경제를 경험해온 현 세대는 불완전한 고용, 선별적인 복지 혜택, 노후생활까지 일자리를 걱정해야 한다.

이제 복지정책은 과거 세대에 대한 보편적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고려하고 과거세대와의 갈등을 없애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까지 고려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인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각국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만족도 등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자국의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교연구를 통해 자국의 제도 개혁에도 근거자료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의 복지인식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World Values Survey(세계가치조사)⁷⁾는 미국 미시건 대학의 Ronald Inglehart가 주도하여 설계한 ‘유럽 가치조사(European Value Study)’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직업 생활, 결혼 및 가족생활, 사회문화, 도덕, 종교, 정치에 관한 조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장 공신력 있게 인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등 주관적인 가치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 홈페이지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조사항목 예시

- V18: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 V19: 당신은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합니까?
- V24: 당신은 빈곤, 고용, 주택, 인종 형평성 등의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합니까?
- V96: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당신의 삶은 요즘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10점 척도)
- V225: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European Social Survey(유럽사회조사)⁸⁾는 유럽 정치에 대한 가치의 변화, 태도, 상징, 행동 양식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유럽 정책과 관련한 핵심 논쟁에서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적인 기준, 행동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European Social Survey 홈페이지). 조사는 핵심 문항(core module)과 참고 문항(로테이팅 모듈, rotating module)으로 구성되는데 참고 문항은 특정 학문이나 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사회심리학적,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로 변화와 지속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European Social Survey 홈페이지).

조사는 2002/2003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핵심 문항에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사회적 신뢰, 정치, 사회적 배제를, 참고 문항에는 사회복지, 연령(E)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분석을 위해 사회인구학적 프로파일을 필수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8)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 조사항목 예시

- D7: 현재 우리나라에 100명의 근로인구가 있다고 할 때 매일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 D9: 현재 우리나라에 100명의 근로인구가 있다고 할 때 기본적인 생활에 충분할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 D11: 연금생활자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10점 척도)
- D12: 실업자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
- card 29: 정부가 다음의 사항들을 얼마나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나?(10점 척도)
 - D15: 정부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보장해야 한다.
 - D16: 정부는 아픈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 케어를 보장해야 한다.
 - D17: 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 D18: 정부는 실업자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D19: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게 충분한 아동보육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 D20: 정부는 일시적으로 아픈 가족구성원을 돌볼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 card 30: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하십시오.
 - D21: 너무 큰 부담을 경제에 미칠 때까지
 - D22: 광범위하게 빈곤을 없앨 수 있을 때까지
 - D23: 보다 형평적인 사회를 이룰 때까지
 - D24: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도록 촉진할 수 있을 때까지
 - D26: 사람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더 용이하게 균형잡을 때까지
 - D27: 사람들이 나태해질 때까지
- card 31: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답하십시오.
 - D30: 의료보장은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10점 척도)
 - D31: 국세청은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실수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가?
- card 33:
 - D34: 정부가 조세를 더 부과하고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낮추고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감소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10점 척도)
 - D36: 더 많은 연금을 납입한 고소득자가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연금을 많이 납입하지는 못했지만 욕구가 많은 저소득자가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D37: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한 고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실업했을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욕구가 많은 저소득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D46: 최근 연금의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금부터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당신의 견해에 가까운 대답은 무엇인가?
 - a. 국가는 현재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다.
 - b. 국가는 현재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불할 능력은 있으나 급여액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 c. 국가는 노령연금 수준을 인상하여 지불할 능력이 있다.

다음으로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국제사회조사, ISSP)⁹⁾는 사회과학연구의 중요한 주제들을 포괄하는 조사에 대한 국가간 협동 프로그램으로 연례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국제사회조사 연구자들은 특히 모든 국가에서 의미있고 연관되는 질문들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ISSP 홈페이지). 조사의 주제는 고정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며, 매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가족 및 출산과 관련된 ‘가족과 성 역할 변화(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조사’는 1988년, 1994년, 2002년에 수행되었다.

□ 조사항목(Family) 예시

○ R1: woman(5점척도)

- a. 일하는 엄마도 전업주부처럼 자녀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
- d. 직업이 좋다고 해도 여성은 사실 가정과 자녀를 돌보기를 원한다.
- e. 전업주부도 임금을 받을 만한 노동으로 충분하다.

○ R2: 소득자

- a.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가구의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b. 남성의 일이 돈을 버는 것인 반면 여성의 일은 가족과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 R4: 결혼에 대한 인식

- a. 기혼자들은 일반적으로 미혼자들보다 행복하다.
- b. 불행한 결혼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 d. 한부모는 양부모가 함께 하는 것처럼 자녀를 키울 수 있다.
- g. 이혼은 종종 커플이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최선의 선택이다.

○ R6: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 a. 일하는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는 유급모성휴가를 받아야 한다.
- b. 맞벌이 가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를 받아야 한다.

○ R7: 부부간 소득의 공유에 대한 인식

- a. 나는 모든 소득을 관리하고 나의 배우자/파트너의 일정 부분을 준다.
- b. 나의 배우자/파트너가 모든 소득을 관리하고 내게 일정 부분을 준다.
- c. 우리는 모든 돈을 한 곳에 관리하고 필요할 때 각자 꺼내 쓴다.
- d. 우리는 약간의 돈을 한 곳에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저축한다.
- e. 우리는 각자 돈을 관리한다.

9) <http://www.issp.org>

복지인식과 관련된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조사’는 1987과 1992년, 1999년, 2009년)에 수행되었다.

□ 조사항목(Social Inequality) 예시

- Q1: 아래의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시오.
 - a. 부유한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b. 교육을 잘 받은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Q6: 다음의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나타내시오.
 - a.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다.
 - b.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감소시킬 책임은 국가에 있다.
 - c.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적절한 삶의 질을 제공해야 한다.
 - d. 정부는 빈곤층에게 급여를 덜 줘야 한다.
- Q8: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에 비해 자녀에 대한 교육을 더 잘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Q9: 모든 국가에서 서로 다른 사회 그룹들 사이에는 차이나 갈등이 있다. 당신의 국가에서 갈등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시오.
 - a. 빈곤층 vs 부유층
 - b. 노동계층 vs 중산층
 - c. 관리직 vs 생산직
 - d. 상류층 vs 하류층
- Q11: 당신의 직업을 당신 아버지의 직업과 비교했을 때, 당신이 가진 직업의 지위 수준은 어떠한가?
- Q12: 사람들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들은 얼마나 중요한가?
 - b. 교육기간과 훈련기관에 소요한 횡수
 - c. 가족을 부양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나
 - d. 부양할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에게 소요되는 비용
 - e.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 f.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국제기구의 조사와는 다르게 각국에서 수행되는 조사는 자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조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항이 포함되거나 자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독일복지조사와 미국의 잭슨빌 삶의 질 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GESIS, 독일복지조사)¹⁰⁾는 오랜기간 분단되어 있던 동독과 서독의 정보교환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복지발달 수준과 통합, 배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독일 통일 전 1998년에 시작되어 이후 비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 조사항목 예시

○ 연령, 성별, 국적

- 당신이 속한 사회계층을 고른다면, 어느 것을 고르겠습니까?
: 노동계층, 중산층, 중상층, 상류층

○ 행복

-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당신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결혼과 배우자

-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당신의 결혼(동거)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친구를 사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 가족 외에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이상 있습니까?

○ 근로 일반

-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당신은 주부로서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여성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업 주부가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이유가 당신에게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전업 주부 선호; 기혼 여성은 직업을 가지면 안됨;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면 안됨; 내가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남편이 반대; 가사 일에 모든 시간을 소비 등

○ 복지/생활 일반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체제라 불리는 독일의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기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최근 사회보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아플 경우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 당신이 실업한 경우에는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 연금 생활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에는 상층 그룹과 하층 그룹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http://www.gesis.org>

마지막으로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카운티에서 행해지는 JCCI's Quality of Life (잭슨빌 삶의 질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시민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잭슨빌 지역위원회(JCCI)가 초당적인 시민 조직으로 플로리다 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조사항목 예시

- 사회적 웰빙과 통합 제고
 - 인종 차별이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한 비율
 - 청소년 출산율
 - 청소년 후속 출산율
 - 12년 이상 교육받은 여성의 출산율
 - 아동 1,000명당 아동 학대 보고율
 - 아동 1,000명당 입양율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수용 기간의 중위값
 - 혼인을 대비 이혼율
 - 유자녀 부부의 이혼건수
 -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
 - 주당 7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
 - 연방 캠페인 기부금
 - 연간 조사에서 인구 100,000명당 노숙자로 판명된 사람의 수

2. 우리나라의 복지인식조사

우리나라에서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는 복지실태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경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비정기적으로 조사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기적인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복지패널이 대표적이며, 비정기적인 조사로는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국민의식조사(2009)가 있다.

과거에는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가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아젠다를 개발하고 정책의 대응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용이 불안정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노년층 부양 부담 등과 맞물려 세대 간 갈등의 불씨로 점화되면서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고령 인구의 고용 불안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통해 중고령 인구의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이 단절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매몰되어 있는 청년 실업의 고용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전면 대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이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민연금의 부담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60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세대 내(intra-generational) 복지인식의 차이와 함께 세대 간(inter-generational) 복지인식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인식의 차이를 수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 복지제도와 정책에 대한 복지인식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인식조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인식조사가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반복핵심조사와 ISSP 주제모듈 조사, EASS 주제모듈 조사로 구성된다. 먼저 반복핵심조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 등의 핵심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300여개의 변수들로 구성된다. 2010년 제8차 KGSS 조사의 반복핵심 설문은 정치관련 문항과 경제 관련 문항, 사회 관련 문항, 배경 변수 문항으로 구성된다(김상욱 외, 2010: 34).

- 조사항목 예시
- 정치관련 문항
 - 이념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전망, 선호정당, 정당평가, 투표행위, 국정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주변국에 대한 호오도, 북한·민족통일 문제 등
 - 경제관련 문항
 - 한국경제 전망, 가계상황 등
 - 사회 관련 문항
 -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스트레스, 행복감, 건강상태, 종교 및 믿음, 계층귀속감 등
 - 배경 변수 문항
 -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과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수, 가계소득, 취업상태, 고용지위, 응답자의 직업과 종사 산업 분야 등 ISSP, EASS, ESS 등 국가간 비교연구를 지향하는 국제조사협력기구에서는 표준화된 분석을 위하여 이른바 '표준배경변수(standard background variables)'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들로서 KGSS의 반복핵심 설문이란 부분을 구성

자료: 김상욱 외(2010),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p. 3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에 비해 ISSP 주제모듈 조사는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s)」,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가족과 성 역할의 변화(Family & Changing Gender Roles)」, 「노동지향(Work Orientations)」, 「종교(Religion)」, 「환경(Environment)」,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시민권

(Citizenship)», 「레저와 스포츠(Leisure Time & Sports)», 그리고 「건강(Health)」 등 모두 11가지가 수행되었다(김상욱 외, 2010: 35).

그러나 KGSS에서 복지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설문은 포함하지 않으며 문항 11.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5점척도), 문항 6. 현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5점척도), 문항 13. 현 정권이 빈부격차 해소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5점 척도), 문항 73.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5점 척도) 등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이다. 복지패널은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로 구성되는 고정 조사가 있고 분야별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다. 부가조사는 아동조사표, 복지인식조사표, 장애인조사표, 가장 최근에 수행된 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는 2010년 자료가 유용하다.

복지인식조사는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III. 정치참여와 성향으로 구성된다. 특히 복지재원과 대상범위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는 정부 재정 중 복지분야에 대한 점유율이나 복지 분야 중 대상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보다는 주로 복지재원의 확보방안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선택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한계가 있다. 즉 복지인식을 ‘복지’라는 항아리에 들어가는 ‘재원’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지=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경제학적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복지인식 조사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조사항목 예시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
 -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5점 척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5점 척도)
 -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5점 척도)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5점 척도)
- 복지를 제공하는 여러 부문에 대한 견해
 -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5점 척도)
 - 빈곤 예방 및 감소(5점 척도)
-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 각 소득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5점척도)
 -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5점척도)
 -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의견
 -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이 낸 세금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쓴다고 할 때 어디에 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 실업문제, 교육문제, 아동양육문제, 장애인문제, 주거문제, 빈곤 등)

자료: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5차조사표_복지인식조사

한 국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것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위험의 수준과 각국에서 이미 도입된 복지 프로그램 현황과 비중,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사회통합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대명 외(2010)는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갈등,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귀속감과 사회적 자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계층의식 등을 조사하고 있어 복지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문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강신욱 외(2011)는 전년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사회통합 및 복지의식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의 중요성은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빈곤층에 대한 인식, 빈곤의 원인, 본인이 빈곤해질 가능성, 사회적 위험과 빈곤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의료와 주거, 고용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들과 고소득자들의 세금 수준과 별도 민영 의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는 데 있다. 한편 복지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된 문항은 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와 유사하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해온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는 세금부담과 복지대상의 확대, 자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김태완 외, 2012; 최성은 외, 2011; 신영석 외, 2010). 조사문항은 대부분 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복지인식은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 조세부담과 복지확대간의 상쇄, 복지재원조달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설계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복지 인식과 욕구를 조사하고자 설계한 조사표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응답자의 가족 상황은 가족 내 복지 수혜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의 종류(공적지원, 사회보험지원)를 조사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복지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중 중점 분야, 복지정책의 확대 여부에 대한 찬반, 복지정책 우선순위, 복지재원 부담 의향과 재원조달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해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성과 연령, 거주지, 동거가족 수와 월평균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한 모집단은 제주자치도 및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표본추출방법은 2012년 주민등록상의 19세 이상 인구에 따른 성, 10세 연령대 및 광역시도 거주자 수에 따른 비례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표본 수는 1,000명이고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pm 3.1\%$ 이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조사(조사업체: 인포서치)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50%로 동일하고,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각각 17.6%, 18.6%로 나타났다. 40대, 50대, 6~70대가 각각 20% 내외로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은 광역시 48.5%, 중소도시 40.5%, 농어촌(군) 11.0%로 나타났고, 동거가족은 1~2인 22.5%, 3~4인 59.7%, 5인 이상 14.8%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

월 미만이 23.2%로 가장 많고, 200~300만원 15.7%, 400~500만원 1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0만원 미만 9.4%, 500만원 이상 18.5%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응답자수	구성비
전체		1,000	100.0
성	남	500	50.0
	여	500	50.0
연령	20대 (19세 포함)	176	17.6
	30대	186	18.6
	40대	233	23.3
	50대	205	20.5
	60, 70대	200	20.0
거주지 유형	광역시	485	48.5
	중소도시	405	40.5
	농, 어촌(군)	110	11.0
동거가족 수	1~2인	225	22.5
	3~4인	597	59.7
	5인 이상	148	14.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4	9.4
	100~200만원 미만	106	10.6
	200~300만원 미만	157	15.7
	300~400만원 미만	232	23.2
	400~500만원 미만	146	14.6
	500만원 이상	185	18.5
	모름/무응답	80	8.0

제3절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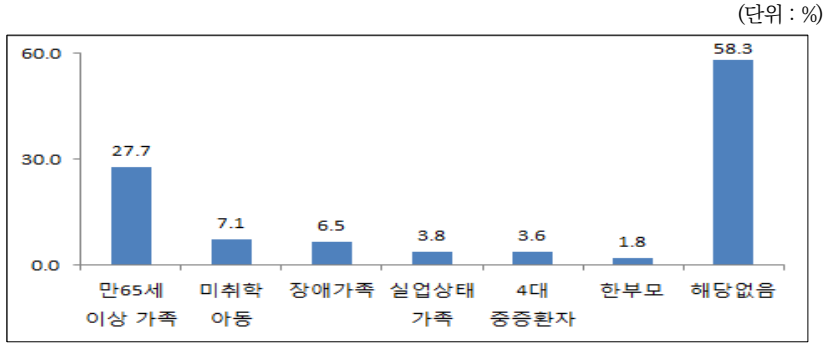
1. 복지수혜

선별적인 복지제도의 경우 복지수혜자와 복지재원부담자가 상이한 관계로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반해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경우 복지수혜자와 복지재원부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호불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 선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복지수혜의 경험이다. 즉 선별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부담과 상관없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급여를 선호하는 반면,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 때 전제 조건은 내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재정 내에서 복지혜택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선별적인 복지든 보편적인 복지든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복지욕구를 측정하고자 가족 중 복지욕구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 때 복지욕구는 주요한 복지제도의 자격 요건인 장애, 노인, 미취학자녀, 실업, 4대 중증질환, 한부모가족이다.

가족성원으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1,000명 중 417명으로 41.7%에 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65세 이상 가족’과 동거한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미취학 아동’ 7.1%, ‘장애가족’ 6.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가족 중 복지수혜 구성원(복수응답, n=1,000)



가족 중 사회복지 대상층이 있는지 여부를 거주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시 응답자(485명) 중 36.1%, 중소도시 응답자(405명)중 46.9%, 농어촌(군) 응답자(110명) 중 47.3%가 복지 대상 동거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보다는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 가족 중 복지수혜 구성원-상세분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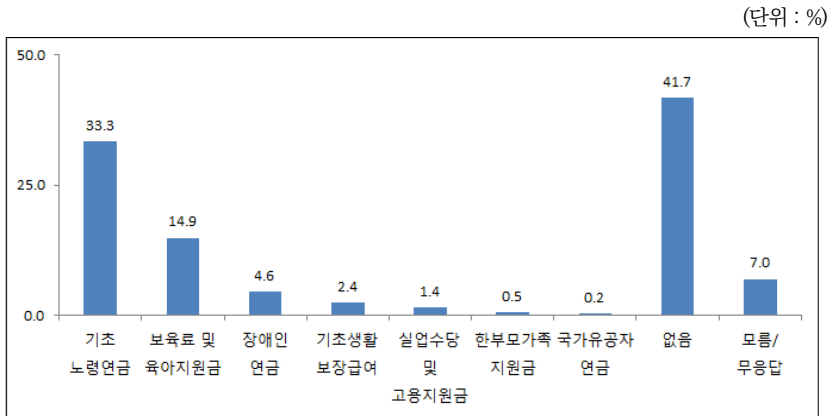
		응답자수	복지 대상층	해당 없음	합계
전 체		1,000	41.7	58.3	100.0
거주지 유형	광역시	485	36.1	63.9	100.0
	중소도시	405	46.9	53.1	100.0
	농어촌(군)	110	47.3	52.7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4	78.7	21.3	100.0
	100~200만원 미만	106	51.9	48.1	100.0
	200~300만원 미만	157	43.3	56.7	100.0
	300~400만원 미만	232	36.6	63.4	100.0
	400~500만원 미만	146	30.8	69.2	100.0
	500만원 초과	185	28.1	71.9	100.0
	모름/무응답	80	47.5	52.5	100.0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78.7%, 100~200만원 미만 차상위계층 가구의 51.9%가 가족 중 복지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복지 수혜 대상층과 동거하는 417명의 응답자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4명(41.7%)으로 10명 중 4명 이상은 가족 중 복지대상과 동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살펴본 결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33.3%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및 육아지원금’ 수령가구는 14.9%, ‘장애인 연금’ 수령가구 4.6%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수령가구 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가족 중 복지 수혜 대상자의 복지급여(n=417)



이를 거주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53.7%와 55.8%로 유사한 반면, 농어촌(군)의 경우에는 75.0%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거주지 유형에 따른 복지 대상층 정부지원 수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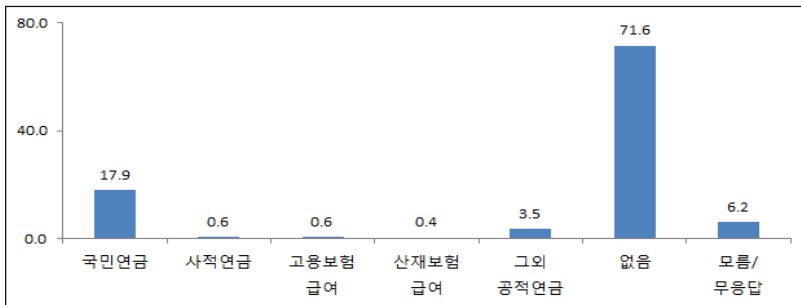
(단위 : %)

		응답자수	정부 지원 수혜	없음	모름/무응답
전 체		417	57.3	41.7	7.0
거주지 유형	광역시	175	53.7	44.0	8.0
	중소도시	190	55.8	43.7	6.8
	농어촌(군)	52	75.0	26.9	3.8

정부의 지원 외에 사회보험에 대한 복지수혜 여부를 측정하고자 현재 수급하고 있는 사회보험 급여에 대해 조사하였다. 1,000명의 응답자 중 1가지 이상의 사회보험을 수급하고 있는 응답자는 22.2%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3명도 안되는 것이다. 이 중 국민연금 수혜자가 17.9%로 가장 많았으며, ‘사적연금’이나 ‘고용보험 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의 수혜자는 1% 미만 이었고, ‘그 외 공적연금’ 수혜자도 3.5%에 불과하다.

[그림 3-3] 사회보험 수혜자 (복수응답, n=1,000)

(단위 : %)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 계층과 100~200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각각 35.1%와 36.8%가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들 계층에서도 약 60%에 달하는 계층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3-4〉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사회보험 수혜(복수응답)

(단위: 명, %)

		응답자수 (명)	사회보험 수혜	없음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23.0	71.6	6.2
월평균 가 구 소 득	100만원 미만	94	35.1	60.6	4.3
	100~200만원 미만	106	36.8	60.4	5.7
	200~300만원 미만	157	26.1	71.3	2.5
	300~400만원 미만	232	19.0	76.7	4.7
	400~500만원 미만	146	16.4	78.8	6.2
	500만원 초과	185	17.3	77.8	5.4
	모름/무응답	80	21.3	57.5	22.5

응답자 1,000명중 맞벌이 부부이거나 맞벌이 부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는 35.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는 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57.1%), 50대는 41.0%, 20대와 30대는 각각 35.2%와 31.7%가 맞벌이 부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400~5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각각 54.1%와 51.4%가 맞벌이 부부 가족이었던 반면, 100만원 미만 가구와 100~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각각

3.2%와 19.8%로 낮게 나타났다.

〈표 3-5〉 응답자 연령별 맞벌이 가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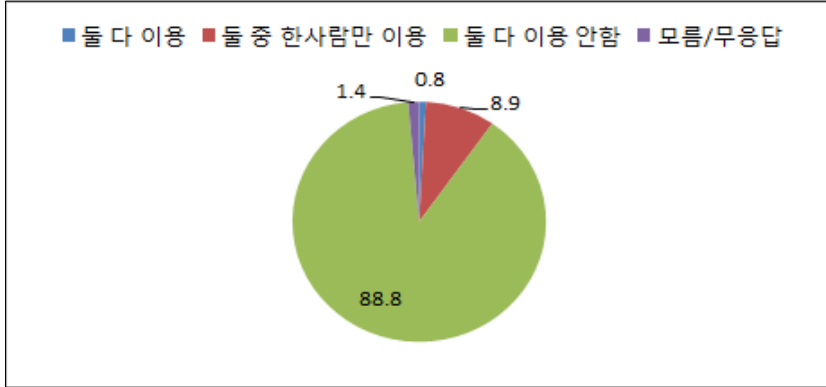
		응답자 수	그렇다	아니다	합 계
전 체		1,000	35.8	64.2	100.0
연령대	20대 이하	176	35.2	64.8	100.0
	30대	186	31.7	68.3	100.0
	40대	233	57.1	42.9	100.0
	50대	205	41.0	59.0	100.0
	60, 70대	200	10.0	9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4	3.2	96.8	100.0
	100~200만원 미만	106	19.8	80.2	100.0
	200~300만원 미만	157	25.5	74.5	100.0
	300~400만원 미만	232	38.8	61.2	100.0
	400~500만원 미만	146	54.1	45.9	100.0
	500만원 초과	185	51.4	48.6	100.0
모름/무응답		80	37.5	62.5	100.0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두 사람 모두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88.8%로 가장 많고, 둘 중 한 사람만 이용한 경우 8.9%, 둘 다 이용한 경우 0.8%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부부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제도 이용률은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직업유형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은 관계로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하지 않은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3-4] 맞벌이 부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n=358)

(단위 : %)



2. 복지정책 우선순위

1,000명의 응답자 중 547명(54.7%)은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20명(42.0%)은 복지정책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진 응답자가 복지에 대한 기대를 가진 응답자에 비해 12.7%p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 대한 바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대와 50대 그리고 6,70대의 경우 각각 60.1%, 67.3%, 65.0%가 경제성장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한 반면,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56.8%와 61.3%가 복지정책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여 연령에 따른 복지정책 우선순위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3-6〉 연령대에 따른 경제성장률과 복지정책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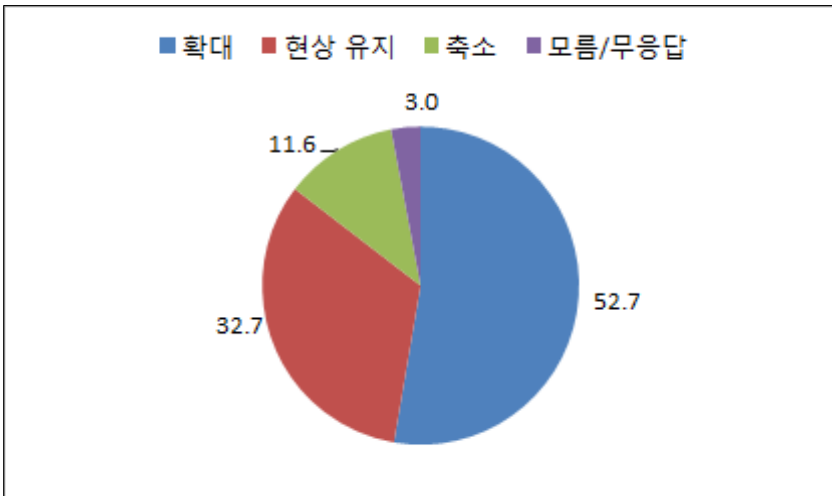
(단위 : 명, %)

		응답자 수	경제성장	복지정책	모름/무응답	합 계
전 체		1,000	54.7	42.0	3.3	100.0
연령대	20대이하	176	39.8	56.8	3.4	100.0
	30대	186	37.1	61.3	1.6	100.0
	40대	233	60.1	38.6	1.3	100.0
	50대	205	67.3	31.2	1.5	100.0
	60, 70대	200	65.0	26.0	9.0	100.0

다음으로 현재의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52.7%는 복지정책을 현 수준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상유지’를 바라는 응답자는 32.7%, ‘축소’할 것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11.6%로 나타났다.

[그림 3-5] 복지정책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 (n=600)

(단위 : %)



복지확대에 대한 희망 역시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의 경우 70.5%가 확대를 희망했고, 30대는 66.1%, 40대는 51.9%로 과반 이상이었던 반면, 50대의 경우는 43.9%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6~70대의 경우는 확대 희망자가 34.5%인 반면, 현상유지를 원하는 응답자가 42.0%로 7.5%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연령대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응답자 수	확대	현상유지	축소	모름/무응답	합계
전체		1,000	52.7	32.7	11.6	3.0	100.0
연령대	20대 이하	176	70.5	21.0	6.8	1.7	100.0
	30대	186	66.1	26.9	4.8	2.2	100.0
	40대	233	51.9	32.6	14.2	1.3	100.0
	50대	205	43.9	39.0	15.6	1.5	100.0
	60, 70대	200	34.5	42.0	15.0	8.5	100.0

현재의 복지정책을 ‘현상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443명 중 ‘경제성장이 더 시급한 과제라서’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혜택은 적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니까’라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성별로 집계해 본 결과, 남성들은 ‘경제성장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8%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6.1%로 13.7%p 더 많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5%로 ‘경제성장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30.2%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4%, ‘경제성장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5%

로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반면, 20대와 60대의 경우에는 '세금지출'이 각각 20.4%와 19.3%인 반면 '경제성장 시급'이 34.7%와 41.2%로 경제성장의 시급성을 지적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성, 연령대 별 복지정책 현상 유지 및 축소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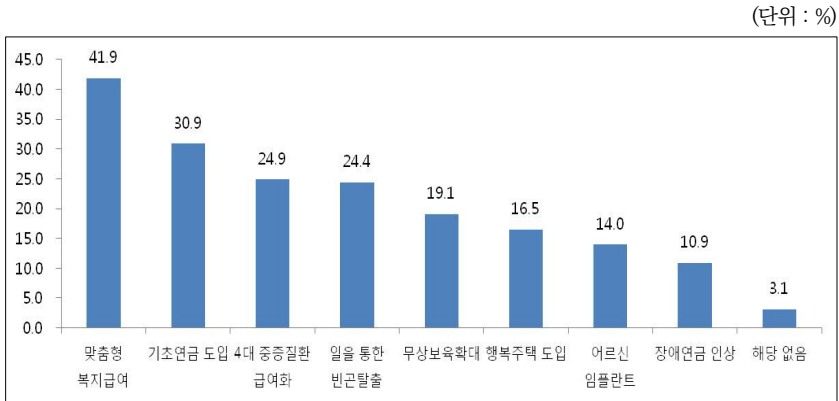
		응답자 수	경제성장 더 시급	과다 세금지출	무위도식 증가	현재수준 적절	민간자율 바람직	모름/무응답	합 계
전 체		443	34.8	28.9	23.7	9.0	2.5	1.1	100.0
성	남	211	39.8	26.1	21.8	8.5	3.3	0.5	100.0
	여	232	30.2	31.5	25.4	9.5	1.7	1.7	100.0
연령대	20대	49	34.7	20.4	20.4	16.3	8.2	-	100.0
	30대	59	30.5	42.4	16.9	6.8	3.4	-	100.0
	40대	109	31.2	32.1	26.6	8.3	1.8	-	100.0
	50대	112	33.9	32.1	28.6	4.5	-	0.9	100.0
	6~70대	114	41.2	19.3	21.1	12.3	2.6	3.5	100.0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가 41.9%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 도입'이 30.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4대 중증질환 급여화'가 24.9%,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2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무상보육 확대'는 19.1%로 20%를 넘지 못했다.

30대의 경우는 육아세대란 점에서 '무상보육 확대'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필요한 정책으로 선택한 경우가 38.2%로 비슷했으며, 50대와 60, 70대의 경우는 노년층이란 점에서 '기초연금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경우가 각각 39.5%와 39.0%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

여'(50대: 37.6%, 60, 70대: 36.5%)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6]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 (복수응답,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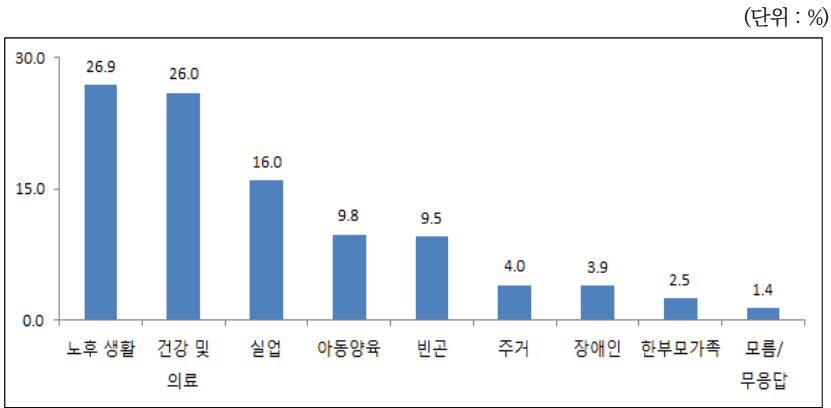
<표 3-9> 연령대에 따른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복수응답)

(단위 : 명, %)

	전 체	20대	30대	40대	50대	6~70대
응답자 수	1,000	176	186	233	205	200
저소득층맞춤형복지	41.9	56.3	38.2	42.5	37.6	36.5
기초연금도입	30.9	25.6	22.0	27.5	39.5	39.0
4대중증질환급여화	24.9	19.9	20.4	30.0	32.2	20.0
일을통한 빈곤탈출	24.4	18.2	24.2	27.0	31.2	20.0
무상보육 확대	19.1	19.3	38.2	20.6	11.7	7.0
행복주택 도입	16.5	29.0	22.6	15.9	9.3	8.0
어르신임플란트	14	11.4	9.7	15.9	13.7	18.5
장애연금 인상	10.9	12.5	12.9	13.3	6.3	9.5
해당 없음	3.1	2.3	1.6	0.9	3.9	7.0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노후 생활’과 ‘건강 및 의료’ 분야를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 각각 26.9%와 26.0%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실업’의 경우가 16.0%였으며, ‘아동양육’(9.8%), ‘빈곤’(9.5%), ‘주거’(4.0%) 및 ‘장애인’(3.9%) 순이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2.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림 3-7] 복지정책 수행 시 가장 중점 과제 (n=1,000)



20대와 30대는 ‘건강 및 의료’와 ‘실업’에 중점을 두길 바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건강 및 의료’는 각각 24.4%와 28.0%로 나타났다. ‘실업’의 경우는 20대와 30대 모두 각각 22.2%와 22.0%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40대 이후부터는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 40대 29.2%, 50대 및 6~70대의 경우는 각각 34.6%와 35.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연령대 별 복지정책 수행 시 가장 중점 과제

(단위: 명, %)

	전 체	20대	30대	40대	50대	6~70대
응답자수	1,000	176	186	233	205	200
노후 생활	26.9	15.3	17.7	29.2	34.6	35
건강 및	26	24.4	28	21.9	25.4	31
실업	16	22.2	22	14.6	14.1	8.5
아동	9.8	13.6	14.5	8.6	5.9	7.5
빈곤	9.5	10.8	5.4	10.7	13.2	7
주거	4	6.3	7	6	0.5	0.5
장애인	3.9	2.8	2.7	6.4	2.4	4.5
한부모가족	2.5	4	1.6	2.1	2.9	2
모름/	1.4	0.6	1.1	0.4	1	4

3. 복지자원 조달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복지자원 조달에 관한 문제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응답자의 56.7%가 찬성하여 과반을 넘은 반면, 반대한 응답자는 43.3%로 찬성자가 13.4%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은 복지 증세에 대해 ‘찬성’ 의견이 63.4%, 반대가 36.6%로 찬성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여성은 두 의견이 각각 50.0%로 양분되었다.

연령별로는 19세를 포함한 20대의 경우 ‘찬성’이 69.3%로 70%에 달한 반면, 40대의 경우에는 50.2%로 ‘반대’ 49.8%와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별로는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 소득층

의 경우 찬성이 각각 52.1%와 48.1%로 반대 의견 47.9%, 51.9%와 균형을 이룬 반면, 200만원이상 소득계층부터는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이 유의미하게 많아,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찬성 62.3%, 반대 37.7%로 그 차이가 24.6%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성, 연령대, 월평균 가구소득 별 복지세금 증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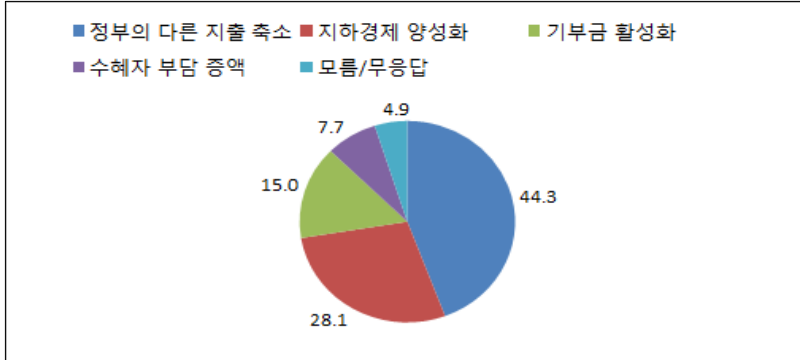
(단위 : %)

		응답자수	찬성	반대	합 계
전 체		1,000	56.7	43.3	100.0
성	남	500	63.4	36.6	100.0
	여	500	50.0	50.0	100.0
연령대	20대 (19세 포함)	176	69.3	30.7	100.0
	30대	186	56.5	43.5	100.0
	40대	233	50.2	49.8	100.0
	50대	205	56.6	43.4	100.0
	60, 70대	200	53.5	46.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4	52.1	47.9	100.0
	100~200만원 미만	106	48.1	51.9	100.0
	200~300만원 미만	157	59.2	40.8	100.0
	300~400만원 미만	232	59.1	40.9	100.0
	400~500만원 미만	146	62.3	37.7	100.0
	500만원 초과	185	53.0	47.0	100.0
	모름/무응답	80	60.0	40.0	100.0

증세 방안 이외의 복지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정부의 다른 지출 축소'를 바라는 의견이 44.3%로 가장 많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28.1%, '기부금 활성화' 방안은 15.0%, 그리고 '수혜자 부담 증액'을 지목한 응답자가 7.7%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증세 방안 이외의 재원마련 방안 (n=1,000)

(단위 : %)



그러나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재원마련 방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른 지출 축소’를 바라는 의견은 20대와 30대가 각각 56.8%와 53.2%으로 과반이 넘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호 응답이 적었지만, ‘지하경제 활성화’를 선호하는 응답은 50대 38.0%, 6~70대 37.5%로 가장 많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응답이 적었다.

<표 3-12> 연령대별 증세 방안 이외의 재원마련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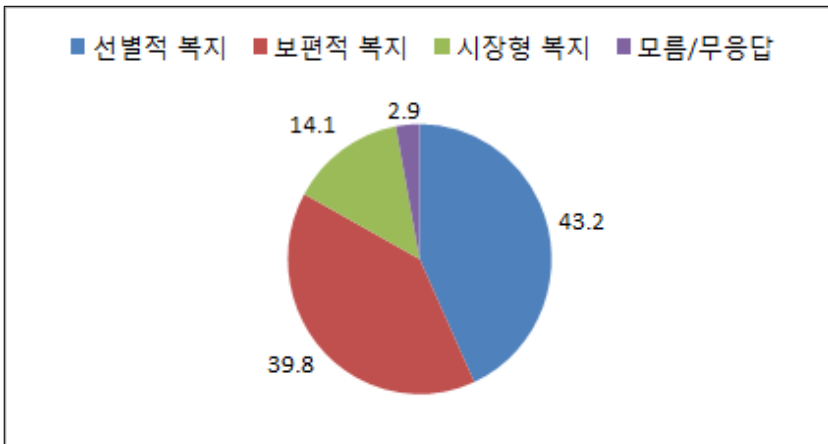
	응답자 수 (명)	정부의 다른 지출 축소	지하경제 활성화	기부금 활성화	수혜자 부담증액	모름/무응답	합 계
전 체	1,000	44.3	28.1	15.0	7.7	4.9	100.0
20대 이하	176	56.8	18.2	12.5	11.4	1.1	100.0
30대	186	53.2	19.9	14.0	11.8	1.1	100.0
40대	233	46.4	25.3	17.6	7.3	3.4	100.0
50대	205	39.5	38.0	15.1	4.4	2.9	100.0
60, 70대	200	27.5	37.5	15.0	4.5	15.5	100.0

4. 한국형 복지모델

장기적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를 희망하는 응답(43.2%)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희망하는 응답(39.8%)이 비슷한 비율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수혜자 부담 중심의 시장형 복지’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14.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 (n=1,000, 단위 : %)

(단위 : %)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 보다 많아 30대는 49.5% 대 32.8%로 ‘보편적 복지’가 16.7%p 더 많았으며, 40대의 경우에는 42.9% 대 34.8%로 ‘보편적 복지’ 선호가 8.1%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선별적 복지’ 선호가 45.4%, ‘보편적 복지’ 선호가 40.0%로 비슷했고, 20대는 ‘선별적 복지’가 46.6%로 ‘보편적 복지’ 38.6%에 비해 8.0%p 더 많은 것으로 나

74 한국형 복지모델 전망과 모색

타났다. 특히 6~70대의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 선호가 57.5%로 ‘보편적 복지’ 선호 28.0%에 비해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선별적 복지’ 선호가 각각 57.4%와 50.0%로 절반 이상이었고, 400~500만원 미만 계층에서는 반대로 ‘보편적 복지’ 선호가 45.9%, ‘선별적 복지’ 선호가 35.6%로 ‘보편적 복지’ 선호가 10.3%p 더 많았으며, 다른 소득계층에서는 양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연령대, 월평균 가구소득 별 장기적 복지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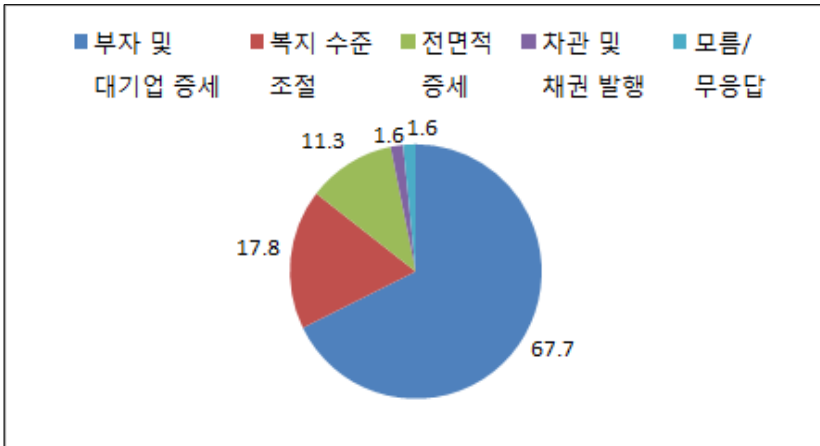
(단위 : %)

		응답자 수	선별 복지	보편 복지	시장 복지	모름/무응답	합 계
전 체		1,000	43.2	39.8	14.1	2.9	100.0
연령대	20대 이하	176	46.6	38.6	14.2	0.6	100.0
	30대	186	32.8	49.5	15.1	2.7	100.0
	40대	233	34.8	42.9	20.2	2.1	100.0
	50대	205	45.4	40.0	12.7	2.0	100.0
	60, 70대	200	57.5	28.0	7.5	7.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4	57.4	24.5	7.4	10.6	100.0
	100~200만원 미만	106	50.0	36.8	11.3	1.9	100.0
	200~300만원 미만	157	45.9	41.4	11.5	1.3	100.0
	300~400만원 미만	232	41.8	43.5	12.9	1.7	100.0
	400~500만원 미만	146	35.6	45.9	17.1	1.4	100.0
	500만원 초과	185	41.1	38.4	20.0	0.5	100.0
	모름/무응답	80	35.0	40.0	15.0	10.0	100.0

복지재원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67.7%)이 ‘부자나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선호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세금을 더 걷지 말고, 복지 수준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7.8%,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세금을 더 걷는’ 방안에 대해서는 11.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복지비용 조달 방안 (n=600)

(단위 : %)



남성의 경우에는 ‘복지 수준 조절’과 ‘전면적 증세’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각각 15.4%와 14.8%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가 20.2%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7.8%로 복지수준을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 별로 분석한 결과, 광역시와 농어촌(군)에서는 ‘복지 수준 조절’과 ‘전면적 증세’ 의견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복지 수준 조절’이 21.7%인 반면, ‘전면적 증세’는 10.1%에 불과해 2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76 한국형 복지모델 전망과 모색

〈표 3-14〉 성, 거주지 유형별 복지비용 조달 방안

(단위 : 명, %)

		응답 자 수	부자 및 대기업 증세	복지 수준 조절	전면 증세	차관 및 채권 발행	모름/ 무응 답	합 계
전 체		1,000	67.7	17.8	11.3	1.6	1.6	100.0
성	남	500	67.6	15.4	14.8	1.4	0.8	100.0
	여	500	67.8	20.2	7.8	1.8	2.4	100.0
거주지 유형	광역시	485	69.5	16.1	11.3	1.9	1.2	100.0
	중소도시	405	64.7	21.7	10.1	1.7	1.7	100.0
	농어촌(군)	110	70.9	10.9	15.5	-	2.7	100.0



제4장 한국형 복지모델의 탐색

제1절 복지패러다임 논의

제2절 전문가 논의

제3절 선진국 사례



4

한국형 복지모델의 탐색 <<

제1절 복지패러다임 논의

과거 한국의 복지논쟁은 복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이에 따라 각 부문별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도출된다면 제도별 분야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한국의 복지논쟁은 오랜 기간의 논의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된 한국의 복지논쟁은 제도별 분야별 개정에서 촉발되었고, 정책의 설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 선봉에 서게 됨으로써 실제 법과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과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은 1996년에 제정되었는데, 과거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 계획에 근간을 두고 정규직 근로자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예, 소득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달라졌고, 국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신사회적 위험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제도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의원은 2010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몇 차례의 공청회와 국회 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몇 가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정의에 “평생사회안전망”¹¹⁾이란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가 평생 동안 국민이 처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한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법 제16조), 이를 근거로 연도별 시행계획(법 제18조)과 지역계획(법 제19조)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명문화하였다.

셋째,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법 제20조).

넷째, 또한 효율적인 사회보장 계획 및 수립, 평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의무를 부여하였다(법 제32조).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보장통계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총괄·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법 제41조)하였다(고경환 외, 2012).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에서 밝힌 평생 사회안전망과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후보시절의 공약과

11) 이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함(법 제3조).

당선인 시절 인수위 발표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국정과제로 확정함으로써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개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보건복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

2013년 5월 28일 공개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요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진기반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전 생애 평생안전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선별적 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 생애에 걸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설

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정책욕구와 전생애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복지정책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선도적이라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한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2013. 1. 16)』에서 박근혜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의 관리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재난적 의료비를 개인이 아니라 세대와 가족 단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4대 중증 질환에 포함되는 질환과 그 외 질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역시 욕구별 급여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보편과 선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사하게 이미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으나 모든 노인에게 다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박근혜대통령 공약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 노인층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제공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것이며 노후소득에 따라 10~20만원 차등지급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및 효과적인 재정운명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와 정책결정자, 학계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위한 패러다임에서 합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다수의 공청회나 토론회,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장(場)이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진척이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의 복지정책 역시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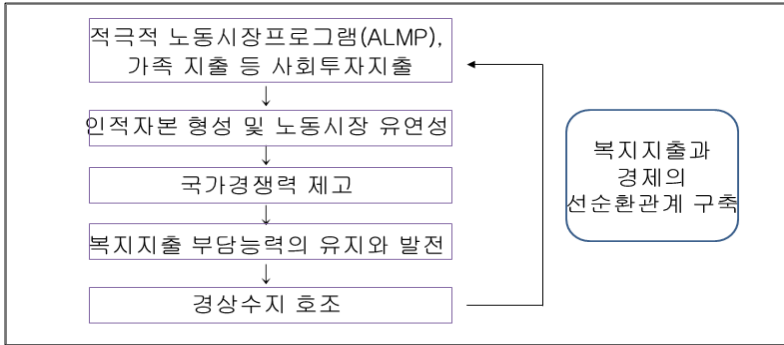
제2절 전문가 논의¹²⁾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복지모델의 국제 비교 및 한국의 현황을 탐색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이 「주요국의 복지 모델 비교」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이 「국민의 복지인식 및 우리나라 복지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 임현진 교수와 송실대 이상은 교수, 고려대 최영준 교수가 토론을 하였다.

남상호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복지지출과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는데(남상호 외, 2011), 고부담-고복지지출 국가군(북구형, 대륙형), 중부담-고지출 국가군(남유럽형), 저부담-저지출 국가군(영미형)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부담-고복지지출 국가군의 복지국가 성공기제는 “많이 거둬서 잘 쓴다”는데 있다. 이들 국가들은 복지지출과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2)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중앙일보·JTBC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2013/10/14)의 발표와 토론을 요약한 것임.

[그림 4-2] 고부담-고복지지출 국가군의 성공기제



자료: 남상호(2013), 주요국의 복지 모델 비교,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심포지엄 자료집, p. 24.

이에 비해 남상호 연구위원은 저부담-고복지지출 국가군은 “덜 견고 부채로 과도한 현금성 지출을 충당”하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로 지적하고, 저부담-저복지지출 국가군 역시 저축률과 투자율 하락과 성장 둔화로 인해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등으로 복지지출과 경제의 선순환 관계 구축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함의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볼 때, 한국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경에는 고복지지출 국가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담수준의 증가세는 낮아 중부담-고복지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 연구위원은 북구형 또는 대륙형 국가의 성공기제를 벤치마킹 해서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세부담의 점진적 확대와 보험료 부담의 확대로 부담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과 가족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증가를 통한 복지확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복지를 인식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 혹은 공생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기한 것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은 있지만,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복지지출이 고복지지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선진국 역시 인구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예, 일본), 다른 국가들은 현 시점에 맞추고, 우리나라만 고령화를 고려하는 비교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오히려 경직성 지출의 증가가 자연증가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며, 빈곤층보다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지투자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부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탐색을 위해 보수적 입장에서 한국재정학회 현진권 회장이 「경제여건에 맞는 복지정책 모색: '정치실패'로서의 복지팽창」을, 진보적 입장에서 인하대 윤홍식 교수가 「체제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진보가 그려야 하는 한국 복지국가」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 안상훈 교수와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가 토론을 하였다.

현진권 회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관련한 과다한 복지 논쟁에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경제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최근 복지 논쟁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과 기여가

조건이 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료급식, 반값 등록금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람에게 재화를 주는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제안하면서 정부 지출 투자우선순위의 조정과 비과세 및 감면의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2060년경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인에 의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우려할 수준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다. 즉 양극화, 갑을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정치지지 전략으로 활용되면서 여야에 상관없이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언하도록 야기하였고, 정치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지정책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에 의한 선심성 복지정책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현회장은 재정준칙(Fiscal rule)을 준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정준칙은 법으로 세입 내 세출원칙을 못 박고, 입법은 정치인이 하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스위스의 경우 정치인들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즉 세금 이상을 초과해서 복지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적 입장에서 윤홍식 교수는 시장의 실패와 경제성장중심의 국가발전에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부(富)가 축적되었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그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금 한국은 고용불안과 주거불안, 의료불안, 교육불안,

노후불안의 5대 민생불안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윤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코포라티즘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소득재분배의 사회적 과제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조세부담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는데 조세감면의 축소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를 통해서 우선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누진적인 보편증세를 이를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전반적으로 현회장이 제안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공감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대 안상훈 교수는 중장기 복지계획의 로드맵을 작성할 때 재정준칙을 고려한 대타협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찬성했고, 연세대 양재진 교수는 시장에서 행해지는 1차 분배가 있고,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2차 분배(재분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정준칙의 도입 혹은 도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고려대 최영준 교수와 연세대 양재진 교수는 대부분의 발표에서 언급된 지표들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보다 확장된 범위의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는데, 복지정책의 확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국민부담율, 재정수지, 국가부채, 복지지출 외에도 국민의 신뢰(정부 및 국가기관), 반부패지수, 삶의 만족도, 빈곤지수, 이웃과의 관계 등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지표들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하게 KDI 윤희숙 박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선진국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계량화된 지표보다도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의 경로의존성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선진국의 발전경로를 따른다거나 선진국형으로 개혁하자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3부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탐색을 위한 100분 토론이 3 대 3 맞장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보수진영에서는 안중범 국회의원(새누리당)과 옥동석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호 교수(연세대)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진보진영에서는 홍종학 국회의원(민주당)과 문진영 교수(서강대), 정승일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참여하였다.

안중범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유형에 대한 발달경로를 따르기보다는 한국의 복지여건과 재정전망에 따른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박근혜정부는 ‘맞춤형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는 후보시절의 공약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지면서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복지공약의 수정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국민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위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기초연금 경우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7차례 회의 끝에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3~4가지 도입방안을 합의문에 담아 정부에 제출하면서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 근거는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대선공약보다 소득 하위 70%에게 집중적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예산안은 통과됐으나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가 입법예고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복지재원에 대한 다양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출의 감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60%),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금융과세 강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40%)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13년 8월 8일 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였고, 소득세율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 역시 커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한국형 복지 모델에 대한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보다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고, 장단기 National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제3절 선진국 사례 검토: 영국의 National Plan

1992년 개최된 리오 회의(the Rio Summit)에서 세계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전념하기로 했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정부는 1998년에 발표한 ‘포괄적인 정부지출 실태 점검(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CSR)’에서 향후 10년간의 장기분석을 토대로 국가정책의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최종만, 2007: 86). 그 이후 영국 정부는 1999년에 「더 나은 삶의 질(A Better Quality of Life)」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일련의 지표들로 측정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결과들을 실행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HM Government, 2005).

1999년 「정부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 백서」는 이러한 개혁의 진행상황 전체를 조망하고 우선 추진할 과제 등을 정리한 종합장기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최종만, 2007: 86). 그리고 매년 정부는 이러한 지표를 통해 각 부처들을 비교하고, 해당 부처의 과거와 비교하고,

계획과 성과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을 통해 추진되었고, 2004년 「약속하라, 그러나 더 열심히 노력하라(Shows Promise, But Must Try Harder)」라는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부처에서 이룩한 상당한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전략을 위해 더 집중해야 할 20가지 핵심 분야가 제시되었다. 영국 정부가 자국 내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천연 자원의 보호와 환경 증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선정되었다(HM Government, 2005: 17).

이와 같은 장기적인 개혁·발전프로그램은 노동당정부 10년을 기점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에 ‘포괄적인 정부 지출 실태 점검(CSR 2007)’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장기구상은 기본적으로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예산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도 소관 분야별로 장기 플랜을 연구사업 등을 통해 수립하고 있다(최종만, 2007:87).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정부지출 점검(Spending Review) 2010」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와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Spending Review 2010」은 복지 비용과 낭비적인 지출을 감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NHS)의 2014/2015년의 영국 정부의 각 부처별로 확정된 지출 예산의 계획과 실행계획, 개혁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지출 점검(2010)은 연간 경직성 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과 각 부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부처별 지출 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s)」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부처별 지출 검토는 2014/2015까지 4개년 동안의 부처별 지출 계획을 검토하고 절약방안과 복지 개혁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HM Treasury, 2010: 5).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는 각 부처가 개혁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를 발간한다. 2010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3가지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4-15년까지의 비전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향후 2년(2011-2012) 동안 실시할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완료기한을 포함한 구조적인 개혁 계획을 제시하며, 공공 서비스와 부처별 행위의 비용과 영향을 보여줄 핵심 지표를 발표한다(HM Treasury, 2010: 9).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영국의 국내외 정책의 핵심으로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오존 문제, 세계적인 사회 불평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방안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¹³⁾. 지금도 영국은 내각사무처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각 부처는 중장기 계획과 실천계획,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을 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고용부는 2013년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New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제시했고 2012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체크리스트(Sustainable development checklist)를 제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09/2010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내각에서는 이를 총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전달계획(Sustainable developments strategy and delivery plan 2011 to 2030)」을 제공하고 있다.

13) Secretary of State's Policy Statement on Safety, Heal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inistry of Defence의 발표내용(2009/6/2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

결론 및 시사점 <<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사회보험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한국은 숨가쁘게 복지국가의 외형을 갖추어왔다. 이제 복지국가의 질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형 복지모델의 지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국형 복지모델의 지향은 열려있는 논의의 장이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제도의 입안을 필요로 할 때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한국에 이식시키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했던 이유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이식되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일본과 독일의 사회보험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의 복지제도는 주로 영미국가들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와 같은 조세를 통한 수당제도이다. 과거 독일식 사회보험제도 중심에서 영미국가들의 잔여적인 수당제도가 도입되어 한국의 복지제도는 서로 다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섞여있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보험체계와 선별적인 수당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제도들이 한국의 정책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제도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복지 현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남유럽 재정위기는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의 복지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고부담-고복지의 유럽모델은 실패한 모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고부담-고복지 유형인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부담율이 높고 공공복지지출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부담 능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복지수준을 증가시키는 반면 부담 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대한 위험이 더욱 극대화된 것이다.

한국은 재정이 건전하고 국가부채의 규모나 속성이 양호하며,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D 경쟁력 순위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지 수준이 낮을 경우 분배 문제 등 사회통합의 한계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재정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일정 수준까지는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IMD 평가 분야 중 정부효율성의 하위분야인 사회적 여건의 경우 고령화수준, 사회통합, 지니계수, 사회정의실현정도, 소득분배정도(하위 10%, 상위 10%)균등한 기회보장, 의회의 여성비율, 사법·행정 및 기업 고위직의 여성비율, 성별 소득차이 등을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실

현수준이 아직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복지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우리나라 노인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는 15.6%로 해당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지만, 빠른 고령화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로 인해 2005년 9.3%인 고령화율이 2050년에는 34.2%에 이르러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공적연금지출의 증가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에 의한 복지지출을 야기한다. 문제는 복지지출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출이 증가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후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복지 지출은 의무지출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최근의 금융위기 때처럼 경제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표 5-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변화 전망

(단위: % of GDP)

	연금관련 지출		보건관련 지출		요양관련 지출		총 증가액 (2005~ 2050)
	기준 연도	2050	2005년	2050년	2005년	2050년	
독일	11.4	13.1	7.8	8.2	1.0	1.9	3.0
프랑스	12.8	14.8	7.0	7.3	1.1	2.3	3.5
영국	6.6	8.6	6.1	6.5	1.1	2.1	3.4
네덜란드	7.7	11.2	6.1	7.4	0.5	1.1	5.4
미국	4.3	6.1	6.3	6.5	0.9	1.8	2.9
일본	7.9	8.5	6.0	7.1	0.9	2.3	3.1
한국	2.1	10.1	3.0	4.6	0.3	4.1	13.4

주: 연금관련 지출의 기준연도는 한국과 일본(2000), 미국(2007), 그 외 국가는 2004년임.
자료: OECD 및 EU 집행위원회

2009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2%로 OECD 평균 22.1%보다 약 12.9%p 낮으나 인구 고령화 정도(연금성속도 등)를 반영하면 현재의 사회복지 지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2050년경에는 그 차이가 3% 이내로 좁혀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5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3% 정도 증가시킬 여력이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 사회통합 비용 절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9가지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야 중 OECD 평균에 비해 가장 차이가 큰 부문은 노령부문이다. 노령부문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연금성속도 등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령부문을 제외하면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실업분야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표 5-2〉 국민소득 2만불 수준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항목별 차이 비교

(단위: %)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타	합
OECD 평균과 차이	35.0	5.6	15.2	15.3	9.2	4.7	9.1	2.7	-3.0	100

주: 한국은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

참고문헌 <<

- 감사원(2013). 감사결과 보고서-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 강신욱·김호기·김석호·우선희·박수진(2011). 한국의 사회통합 및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고경환·장영식·강지원·김태은·고혜연·진재현·신선미(2012). 사회보장통계관리 전략수립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균·최일섭·최성재·조홍식·김혜란·이봉주·구인회·강상경·안상훈(2001).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 김상욱·김석호·김소임·김종수·김지범·문용갑·박재현·신승배·신인철·양종희·이양수(2010).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노대명·강신욱·김호기·이동원·유진영(2010).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외(2009).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안).
- 안상훈(2011). 한국 복지정치의 지형, 한국의 복지정치와 지속가능성.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양재진·민효상(2013).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시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88.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이태진·김태완·김문길·우선희·박은영(2009). 지표로 보는 우리나라의 사회현황과 사회정책의 실태와 동향.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김태완·권소현·김성철·김문길·우선희·박은영(2008).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강신욱·강혜규·고경환·김미곤·이삼식·이상영·윤석명·정영호·장영식·정홍원·고숙자·김동진·김문길·윤강재·이윤경·황도경·강지원·이지혜·전지현·이정은(2012). 미래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복지기획단(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최종만(2007). 영국의 정부시스템 개혁. 나남출판사.

OECD(2013).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HM Treasury(2010). *Spending Review 2010*.

HM Government(2005). *Securing the future-delivering UK sustainable developments strategy*.

사회보장기본법(공포일 2013. 3. 23.)

부 록 <<

1. 해외 보건복지 관련 조사 개요

조사명	목적	시행기관	주기	주요주제	참여 국가
세계 가치 조사	세계시민의 변화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 조사	세계가치 조사연합	1990년~(5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직업; 가족; 사회문화; 도덕; 종교; 정치 등	80개국
유럽 사회 조사	유럽의 변화하는 제도, 태도, 신념, 행동 양식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런던 시티대학 비교사회조사 센터/ZUMA	2002/03년~(격년)	core module: 미디어; 사회적 신뢰; 정치; 종교, 인종 및 민족 등 차별과 사회적 배제; rotating module: 복지 및 서비스에 대한 태도; 노령 및 고령 관련 태도; 사회인구학적 상황 supplementary: 가치	31개국
국제 사회조사 프로젝트	사회과학 연구에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다국간 조사	ISSP	1985년~(1년)	정부역할; 사회망; 사회적 불평등;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노동 경향; 지역; 환경; 국가; 시민권	45개국
독일 복지 조사	개인 복지와 인지된 삶의 질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객관적 삶의 조건 발전 정도와 주관적 웰빙을 측정	WZB ZUMA	비정기적: 1978, 1980, 1984, 1988 (통일이전 서독민) 1990 (통일후: 동독민) 1993, 1998 (동서독 모두)	주거; 가계, 혼인과 가족; 사회연결망; 건강; 교육; 고용; 소득; 참여와 여가; 환경; 범죄, 공공안전, 사회보장; 주관적 웰빙의 세계적 측정; 태도와 가치	동독 서독
잭슨빌 삶의 질 조사	플로리다 주 인구, 고용, 교육 등 지역조사이나 인종차이에 초점	잭슨빌 지역위원회 (JCCI)	1985년~(1년)	9개 분야 113개 지표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 카운티

2. 국내 보건복지 관련 조사 개요

조 사 명	조 사 기 관	조 사 내 용
가계동향조사 (구 가계조사)	통계청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일반사항 - 가구의 연령, 성, 학력, 거주지역, 종사상 지위, 가구유형 -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 가구소비 및 비소비지출(어떤 조사보다도 다양한 항목별 소비액 제공)
사회조사	통계청 (매년/ 복지부문은 부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사항, 문화와 여가활동, 소득과 소비, 사회참여(만족감, 사회적 관계망, 후원 및 단체 참여, 자원봉사, 계층의식, 계층이동), 삶의 질 만족도 - 일반 복지 부문: 생활 여건의 변화, 사회보험료 부담 인식 - 장애인복지부문: 장애여부, 장애인에 대한 견해, 정책 선호 - 노인복지부문: 노후 준비, 생활비 마련, 자녀 동거 여부, 복지서비스 - 노동부문(직업선택요인, 취업장애요인, 근로여건 만족도)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일반사항 - 의료보장(건강 및 의료A, 의료B) - 경제활동상태 - 공사보험(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주거 및 생활여건 - 자산(생활비, 소득,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재산) - 정부 복지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가구노인·아동·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가족
차상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5)	<p>1차 조사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항(가구원수, 성별, 연령, 동거여부, 결혼 여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상태, 장애종류 및 등급, 만성 질환) - 소득 및 지출 실태(생활비 지출, 주관적 최저 생활비, 소득, 부채 및 이자, 주거상황, 재산, 생활여건) <p>2차 조사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항(가구원수, 성별, 연령, 장애종류 및 등급, 중복지장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책대상집단) - 실태(주거, 건강,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의식과 태도, 소득·지출·자산·저축·부채, 가구특성, 부양관계) - 아동가구원용, 노인가구원용, 장애인가구원용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내용
		- 국민복지욕구조사(근로능력자용)
여성가족패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년)	- 가구용설문(가구주 및 가구원 정보, 가구소득, 자산 및 부채) - 여성개인용: 성장과정, 학교생활, 결혼 및 부부생활(결혼에 대한 인식 포함), 가사노동, 출산 및 자녀교육, 부모와의 관계, 가족관련 가치관, 노후생활 등 - 일자리용: 현재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임금·비임금 근로자별 일자리 특성, 일 만족도, 복리후생 및 사회보험 적용,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차별사항, 모성보호제도 등
한국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 (매년)	- 가구용 설문지(가구원 상황, 가족관계, 주거, 자녀교육, 소득, 소비와 저축, 자산과 부채) - 개인용 예비조사(8가지 유형이 있음: 일자리 상태, 근로계약, 임금, 노동조합 등) - 취업자·미취업자개인 설문지(일자리 상태, 근로시간, 구직활동,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영어 능력, 기타 등) - 부가조사 설문지(은퇴·노후생활, 소득, 가족관계)
성장·분배·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전화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응답자 사항(성,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월평균 가구소득, 총 가구원수, 지역, 지역특성) - 기본인식 조사(생활수준, 빈부격차, 정부지원 수준 변화) - 성장과 분배정책에 대한 의식조사(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의 균형,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의 우선순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세금 증액 찬성 여부 등) - 성장과 분배정책에 대한 욕구조사(빈곤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중산층 지원, 기업활동 보호, 기업 규제 완화 등 욕구)
2009 전국가구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가구일반사항(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수, 성별, 태어난 연월, 동거여부, 혼인상태,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경제활동참여상태, 산업분류, 직종, 고용형태, 가구유형) - 가구생활비(총생활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기타생활비) - 가구의 소득사항(연간총소득액, 근로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보조금, 민간보조, 기타소득) - 가구 자산(총자산액,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재산) - 가구 부채(총부채액, 부채형태, 대출, 부채원인, 주거관련부채, 의료관련부채, 교육관련부채, 이자, 경제적 어려움, 신용불자 가구원 유무)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족생활

조 사 명	조 사 기 관	조 사 내 용
		변화(실직 가구원, 경제상태, 향후 1년 이내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 - 가족부양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여부, 수급자 선정 여부, 탈수급이유) -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주거실태 및 욕구, 건강 실태 및 욕구, 근로 및 소득지원 욕구, 보육, 교육 실태 및 욕구
국민의식조사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9)	- 응답자 일반사항(성, 연령, 학력, 직업, 종교 등) - 분야별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세대갈등 포함) -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갈등 - 공공기관 신뢰도 - 귀속감과 사회적 자본 - 계층의식과 소득수준 등